발간등록번호
12-1833000-000001-1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2023.10.30.)을 거쳐 확정

발간등록번호
12-1833000-000001-1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CONTENTS

I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개요 5

II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내용 15

1.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17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18
3. 지역정책과제 추진 28

III 시 · 도 지방시대 계획 33

IV 중앙정부 부문별 계획 71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74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79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82
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88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02

V 초광역권 발전계획 109

VI 지방시대 종합계획 관리 체계 119

VII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125

부록 129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Ⅰ.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01 | 성격 및 구성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성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中期) 법정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시 · 도 지방시대 계획	+	부문별 계획	+	초광역권 발전계획	→	지방시대 종합계획
(17개 시 · 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지자체)		(지방시대委)

* '시 · 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시 · 도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

- 정부 정책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혁

- '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추진

지방분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04~'08)	지방분권 종합실행계획('09~'13)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18)	자치분권 종합계획 ('18~'22)	지방시대 종합계획 ('23~'27)
균형발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14~'17)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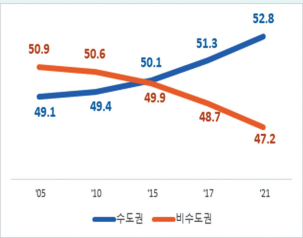
02 | 수립 배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감소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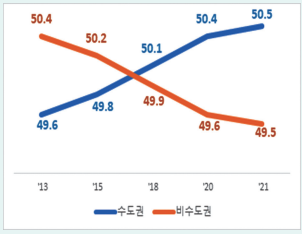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생산)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10년 △1.2%p → '21년 5.6%p)
- (고용)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21년 기준)
- (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22년 기준)
- (인구)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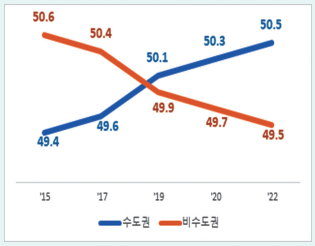
〈GRDP 비중(%) 변화〉



〈일자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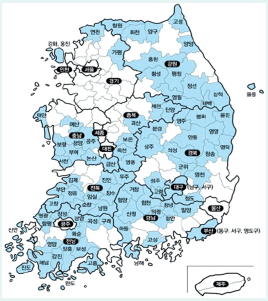
〈인구 비중(%) 변화〉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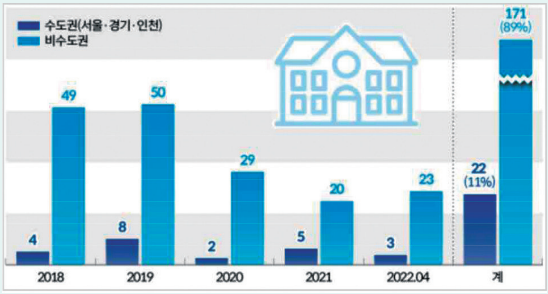
-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 인구감소의 **악순환 반복**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 위기 초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전국 초중고 폐교 현황〉



자료 : 국회 교육위원회(2022)

1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한계

◆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발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는 지방의 생활여건·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에 어려움**

-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추진 방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역량 제고** 및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제약

  * ▲중앙정부가 개발 · 수혜 ·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 · 공모(예시: 혁신도시 · 기업도시, 지역 주력산업, 성장촉진지역),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등 주요 기능도 중앙정부에 집중

-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보조금 지방비 분담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지방 발전을 위한 자체 재원확충 한계**

  * 재정자립도('23, %) : 서울 81.2 vs 전북 27.9, 전남 28.7, 광주 46.2, 대전 46.4

◆ **(행정수요 다변화·복잡화)** 사회의 복잡화·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필요**

- 지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데 한계

- 전국적 인구 감소에도 불구, 지역별로 인구증감·출산율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대응** 필요

  * '00년 이후 지방인구의 수도권 순유출 추세에도 충남 · 충북 · 세종 · 제주는 순유입 지속

  * 동일 시 · 도 내에서도 출산율에 차이('22년 시군별 합계 출산율) : 전남 영광 1.80 vs 곡성 0.54 / 경북 군위 1.49 vs 영양 0.70 / 경기 연천 1.04 vs 동두천 0.75

- 의료*·문화**시설 지원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적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 필요

  * 시 · 도별 의료접근성(㎞) : 서울 2.85 vs 광주 6.04, 부산 · 대전 6.80, 강원 30.47, 경남 31.54

  ** 권역별 공연 건수('21, 공연예술조사) : 서울 8,162건, 충청권 2,428건, 강원도 732건

2 지방경제 체질 약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역량 저하

◆ **(지방경제 활력 저하)**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지방경제의 활력저하 심화

* 연평균 잠재성장률(%, 한은) : ('11~'15) 3.1~3.2 → ('16~'20) 2.5~2.7 → (최근) 2.0내외

- 지방에 밀집된 **제조업 위주 전통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이 둔화****되면서 지방산업의 경쟁력 약화

  * 전국 대비 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중(%) : ('10)51.6 → ('15)49.9 → ('20)47.5

  ** 제조업 생산지수 성장률('10~'22, %) : 수도권 5.45, 대경권 △1.49, 동남권△0.39

- 지방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더딘 회복세***

  * '20~'21년 성장률(%) : 서울 2.2, 경기 3.7 vs 부산 △0.6, 울산 △1.6, 경남 △1.8

- **기업본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고 **R&D투자, 스타트업·벤처 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혁신역량 격차 심화

  * 100대 기업 본사의 86%('22),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위치('21), 상용근로자 수도권 비중 53.7%('20)

  ** 수도권 비중('21, %) : R&D 투자 69.8, 100억↑ 투자받은 스타트업 92.5, 매출 천억 벤처수 62.6

◆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이 **지방의 新성장동력 확보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DX(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기업(%) : 서울 40.2, 경기 31.8 vs 부산 3.3, 대구 2.3, 경남 2.6

  **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16對 '20) : 수도권 22.5%(4%p↑) > 지방 14.1%(2.7%p↑)

-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전통 제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미래 성장성도 불투명**한 상황

  *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21, %) : 전남 24.6, 충남 20.0, 울산 12.5, 서울 0.5

3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 유출 심화

◆ **(교육·정주여건 격차 확대) 교육·정주 환경의 격차 심화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

- 지방의 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높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초·중등 교육 여건**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 지속 확대**

  * 출산율('22) : 서울 0.59, 인천 0.75, 경기 0.84 vs 세종 1.12, 전남/강원 0.97, 경북 0.93

  ** 국 · 공립 보육기관 연평균 증가율('10~'21) : 수도권 8.8% vs 지방 5.9%

-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 긴요**

  * 초 · 중 · 고 폐교 현황('18~'22.4) : 수도권 22개교(11%) vs 지방 171개교(89%)

  ** 지방 주민은 일자리(48.6%), 문화 · 여가 시설 · 서비스(48.4%), 교육 시설 · 서비스(35.4%) 등에서 불평등 체감('지역불평등 국민 인식조사'('21, 국토연 · 한국리서치))

  - 1개 시 · 도당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분포 현황('22, 문화기반시설 총람) : 수도권 382.7개 vs 14개 시 · 도 142.4개

◆ **(지방인재 육성체계 미흡)**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창출 선순환 구조 취약**

- **지방대학 출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인력난 및 지역 혁신역량 저하 등 **악순환 확대**

  * 지방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21, 교육개발원) : 강원 58.0%, 대전 · 세종 · 충남 54.5%, 광주 · 호남 · 제주 29.2%, 대구 · 부산 · 울산 · 경상 27.8%

  * 지방청년 수도권 유입 사유('21, 보사연) : (10~20대 초) "교육" → (20대 중반 이후) "직업"

-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방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생태계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2023년 신년사]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2023년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03 | 수립 경과

◆ '지방시대'의 본격 개막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국정목표 6)'의 비전과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111~120) 선정

* 1)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2)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3)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
5)기업의 지방 이전 · 투자 촉진, 6)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7)지역 맞춤형 창업 · 혁신 생태계 조성, 8)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9)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0)지방소멸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위해 도출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22.4.27,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발효('23.7.10.)에 따라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23.9.14.)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유관 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시대 비전·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23.1월부터 17개 시 · 도 협의회, 17개 중앙부처 · 청 협의회, 지방시대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등 다수 개최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 경과 및 수립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초안 마련 (’22.5.~’23.7.)	•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와 협의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편제(안) 검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발효(’23.7.10.)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23.9.14.)	•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목표로 지방시대 5대 전략 및 9대 정책 제시
↓	
「지방시대 종합계획(안)」 마련 (~’23.10월)	• 시 · 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시 · 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반영
↓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23년 연내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회 보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Ⅱ.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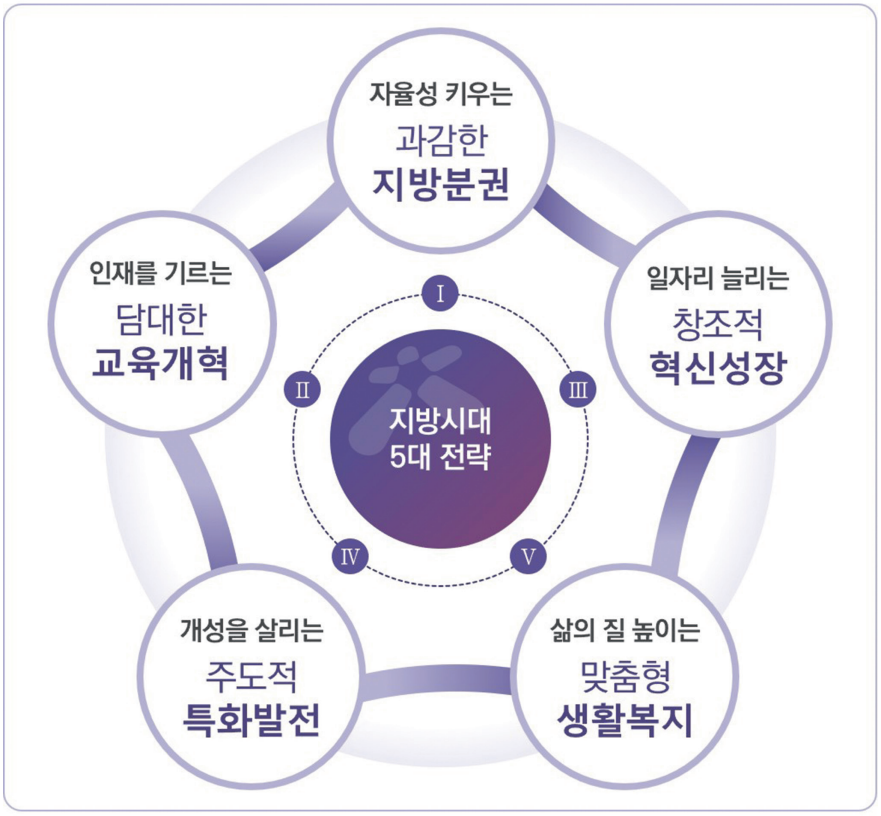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01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자 율 | 공 정 | 연 대 | 희 망



지방시대 4대 가치

- **자율** 지방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치발전의 기반 확보
- **공정** 혁신 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 **연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희망**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 추진

02 |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 · 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지역총생산량의 과반 차지** •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위치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지방인구 유입 촉진**

◆ (지방주도)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新특구

-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집적성 및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주도 하에 계획 수립**

  *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 · 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

- 시행령 아닌 조례중심의 법 체계로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 내에서 **지방정부에 운영상의 자율성**(시 · 도 내 특구 분할 지정 등) **부여**

  * 상한면적 :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 (인센티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거점으로 육성

- (**세제지원**)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全단계에 인센티브 부여**

  * 이전기업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법인세·취득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 등

- (**규제특례**) 기존 특례(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에 더해,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 도입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의결 거쳐 해당규제 적용 배제

- (**투자활성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3~50%)**을 5%p 가산**하고,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 적용

  *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등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現 최대 100억원)

◆ (창업 활성화)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방정부와 **기회발전특구 협력방안 모색**

  * 창업자 · 앵커기업 · 대학 · 지원기관 등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로 창업인프라 집적지역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기획(지방-중앙정부 협업)

-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추진

  *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R&D·바우처 등 우대, 민간 중심의 네트워킹 특화지원 등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고교 졸업 후 **교육·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출**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기준 운영 및 사업별로 분절적인 재정 지원	•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 대학진학·취업 여건 개선**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으로 지역 인재양성- 취업·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교육발전특구*)**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

* 기본방향 발표(9.14.), 공청회(11월초), 시범계획 발표(11월~), 법안 추진('23.下)

◈ **지방 중심**으로 **상향식 추진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유아-초중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지방정부 돌봄 강화**,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

○ **(고교-대학)** 지역 **고교-지방대 연계** 프로그램 강화, **지역인재장학금·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여 **지방대**에서 **역량있는 지역인재 양성**

◆ **(지방대 경쟁력 제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 지원

○ **(RISE* 구축)**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관련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하여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23년 7개 시·도 시범 추진 중 → '25년 전국 시행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추진

◈ **RISE체계 도입 발표 이후 지역의 변화**

- **(지방정부의 대학 투자 확대)** 경북은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 고등교육 투자 및 부산은 지산학협력에 5년 간 1.1조원 투입 등 **과감한 투자계획 발표**
- **(지역-대학 소통 활발)** 지역 여건에 맞는 RISE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회, **TF 및 현장 방문** 등 지역별 **지자체-대학-기업 간 벽을 허무는 소통** 활발

○ **(글로컬대학)**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지역대학 맞춤형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 집중 육성(1교당 총 5년간 약 1천억원)

* ('23)10개 내외 → ('24)10개 내외 → ('25)5개 내외 → ('26)5개 내외 ⇒ 총 30개 내외

◈ **글로컬 신청대학(108개교) 주요 혁신과제**

-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 무학과·무학년제, 융합전공 등 학생 선택권 확대
- **대학-지방정부-산업계 간 벽 허물기** :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인재 양성

○ **(외국인재 유치)** 인력 부족 분야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정부-지방대-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 기업·산업 맞춤형 유학생을 지방대에 유치하여 육성하고, 지역기업·업종 매칭 취업 지원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도심과 떨어진 외곽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산업 · 문화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하여 **지방에 기업 · 인재 유치 한계** • 부처별 개별 사업 추진시 효과 저조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 · 주거 · 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도심융합특구 개념)**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일터)**-주**(주거)**-락**(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예시: 판교 테크노밸리)

❶ **(공간조성) 기업 지원공간**과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❷ **(입주기업)**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 예시: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디지털혁신거점(과기부),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등

❸ **(정주여건)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지원

❹ **(운영·관리)**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 설립(예시: 시·도별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

◆ **(선도사업) 지방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지원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전략(예시)】

❶ (대전) 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 민간 및 공공 수요 등을 포함한 명품 랜드마크 구축

❷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사업지 내부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특화육성

❸ (광주) 시청 인근 미개발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기업지원·주거·문화시설 등 확충, 미래차 산단, 인근 AI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AI, 자동차 등 특화산업 육성**

❹ (대구) 舊경북도청 이전지,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한 산업·연구·문화 공간을 복합개발하고,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❺ (울산) KTX역세권, 테크노파크 일원을 상호 연계 복합개발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인프라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계 **융복합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 **(향후일정)**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 조성·지원을 위해 **특별법**('23.10.6. 국회 통과) **및 하위법령 마련**(조례 적극활용)하고, **5대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 착수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혁신산업 실증·구현 R&D 추진**(~ '26년, 국비 280억원)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지역간 문화 인프라 및 향유 기회의 불균등 지속 *지역규모별 여가생활만족도 격차 : '22년 9.2%p • 진입장벽 낮은 단순창업으로, 소상공인 생존율 저조 및 지역산업으로 발전 한계	•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여가생활만족도 격차 : '27년까지 5%p 내로 축소 •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발굴·육성하여 新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 **(로컬 문화콘텐츠)** 7개 권역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23.12, 13개소)을 통해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로컬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 '24년 컨설팅 지원 → '25~'27년 개소당 최대 200억원 지원(지방비 50%)

❶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❷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❸ 문화공간 조성 ❹ 문화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 지원('24년 400억원) 및 지역 공연예술 단체 지원(6개 지방정부, 90억원)으로 **지역 예술계 자생력 강화**

○ 대한민국 문화매력자산 **'로컬 100'을 발굴·확산**('24년)하고, 워케이션·야간관광 등 특색있는 **로컬 여행콘텐츠 개발***로 내수 활성화

* 예시) 지역 숙박 및 체류 시간을 증대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24년 15개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22~'27, 10개소)

◆ **(로컬 창업)**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5년간 1천개)

* (사례 : 금풍양조) 강화 금쌀 막걸리 제조, 문화 체험 공간조성을 통해 '100년 양조장'이라는 상품(아이템)으로 강화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강한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IP 창출 종합지원사업(특허청),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문체부)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라이콘*으로의 성장 지원**

*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 브랜드)**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연계·협업**을 통해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권창업을 촉진**하고, **로컬 브랜드로 육성**(5년간 40개)

○ 상인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생적 상권을 형성하고 향후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교육컨설팅·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사례 : 서피비치) 양양 군사지역 해변을 서핑 전용해변으로 조성하여 서핑 교육·축제 등으로 영역 확장('21년 기준 50만명 방문, 매출 30억원) → '양양 = 서핑' 로컬 브랜드 구축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첨단산업 기업·인프라의 **지역편중** • 지역은 **산업 생산거점** 기능에 집중 • **전통제조업 산단**의 **낙후**된 환경은 신산업 기업 입주에 장애	• 지역별 비교우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주도 첨단산업 거점** 구축 • 지역의 **혁신거점 기능**(인재, 인프라) **강화** • **현대적 인프라**를 갖춘 **첨단·신산업 산단**

◆ **(첨단전략산업 거점)**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 15개 국가 첨단산단 신규조성('26년부터 착공),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약 550조원 규모)**에 세제·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

* 인허가 신속처리(60일),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공급

◆ **(산단 제도혁신)** 첨단·신산업의 기존 산업단지 입주 확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으로의 획기적 개선 등 **30년 만에 산단 제도 혁신**

○ **(첨단업종 유치)** 유연한 산단 관리로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고, **투자 지원 확대**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증설투자시 연접 공장용지(나대지) 임대차 허용, 비수도권 산단 대상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 & Leaseback)'의 자산 유동화 허용 등

○ **(노후산단 개선) 문화·편의시설 확충**하여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전환**

❶ 편의시설 확충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전환 가능면적 확대**(3만→10만m2)
❷ 구조고도화 사업의 **면적**(10%→30%)과 **대상산단**(농공단지, 도시첨단산단 추가) **확대**
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 면제**

◆ **(지방 과학기술 혁신)** 지역별 과학기술기반 발전전략인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지방 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23.8~)

* [지방정부] 집중 육성할 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설정 → 신규 핵심사업 추진계획 제시 + [과기부] 계획수립 희망하는 지방정부에 컨설팅 지원, 예산 연계 추진

○ **지역 혁신 메가프로젝트** 지원*(시범 '23~'25, 327억원) 및 연구산업 밀집 지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기술사업화 지원('23~'26, 420억원)

* 이차전지(대구·경북), 첨단모빌리티(경남·울산), 인공지능(광주·전남), 해양바이오(충남), 농생명(전북)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자체적인 디지털 생태계(기업·기술·인재)** 조성 미흡	• **지방 주도**의 경쟁력있는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인재양성**과 **기업성장** 및 **지역 사회 디지털 활용 제고**

◆ (혁신지구) **지방에서 창업**하여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를 **'30년까지 5개 이상 조성** 추진

* 시범 추진 :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과감한 지원* 추진**

* 인프라 구축, 규제 특례, 산·학·연 협력, 정부 R&D, 청년선호 정주환경 제공 등

◆ (인재양성)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과 산·학 협력을 통해 지방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형 고숙련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 **'27년까지 SW중심대학 100개로 확대**('22년 44개), **지방 주도**로 **수립**하는 'RISE 계획' 및 '글로컬대학 혁신계획'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 **비학위 고급·전문 교육과정을 확산**하여 **지방기업 수요 중심의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기원 부설 **AI 영재학교 '27년까지 2개 신설**

◆ (강소기업육성) **선도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新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 충청권 AI활용 재난관리, 대구·경북·강원 메타버스 실증, 부울경 정보보호클러스터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서비스(SW) 개발·실증**을 통한 **전환 촉진,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100개 이상** 육성

* 디지털 서비스 보급 · 활용 제고 : [제조 현장] '30년까지 AI 도입률 30% 이상, [농업] '27년까지 온실·축사 30%의 디지털화 등

◆ (활용제고) 지방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 및 **활용접근성 개선**

○ 디지털 배움터(주민센터, 경로당 기반) 교육 고도화 통해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22년 일반국민의 79% 수준 → ' 27년 83%)

○ **'스마트빌리지*'** 등 확산으로 '27년까지 **디지털 SOC 300개 이상 신규 확충**

*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 속 안전 강화, 주민시설 스마트화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보급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개별적·무계획적 **농어촌 공간의 난개발**로 **도시민의 이주 애로** 및 **인구유출 확산** • 정주여건 미비로 청년·은퇴자 등의 **귀농귀촌 수요 대응 한계**	•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공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인구소멸 지역에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타운 조성으로 **지방이주 수요 타겟 정착 지원**

◆ **(농촌공간 재설계)**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 지원**

* '22년 53개소 → '27년 200개소로 확대, 협약 체결 후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 지원

○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가칭)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도입 검토

◆ **(어촌환경 개선)** 배후마을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규모·유형별 **300개소 지원**('23~'30년 3조원)

❶ 경제플랫폼(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원)
❷ 생활플랫폼(어항 자립형, 개소당 100억원)
❸ 안전 인프라(소규모 어촌시설 확충, 개소당 50억원)

◆ **(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 농어업인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금,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 지원해 안정적 농어업 정착 지원('27년 청년농업인 3만명, 청년어업인 2천명)

* [농어업] 청년농어업인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간) 지원, [농업]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7, 15개소), [어업] 청년 어선 및 양식장 임대사업(임대료의 50% 국비 지원)

◆ **(생활인구)**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 활용하여 주기적 방문 유도 및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 지원('24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9곳 선정, 3년간 국비 450억원)

* 예시) 향토기업·대학 등 민간참여 취미형 창업연계시설(수제맥주, 공방), 워케이션센터

◆ **(지역활력타운)**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 조성**

* [주거]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돌봄·체육 등 생활인프라를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 지원 등

○ **'23년 시범사업지역(예산, 청도 등 7곳)**을 선정하여 **지역 수요·특성**을 **살린** 활력타운 조성지원 (지방정부-7개부처 협약체결, '23.10월)

◈ **지역활력타운 사례(예산군)** : 청년상인 등 취창업자를 위한 전용 주거(청년 레지던스) 지원, 버스승강장 조성 및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 등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부처 관할권 문제, 특혜 우려 등으로 지역기업 애로사항 개선에 소극적	• 지역기업 투자 걸림돌을 끝까지 해소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정부·지역·기업의 부담 경감, 단기간내 성과 도출

◆ **(규제 일괄해소) 지역 이전기업 및 투자 희망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투자기업 규제애로 해결사례

포스코는 **광양 제철소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생산 신규 투자를 희망하였으나,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 가능업종을 확대**하여 **포스코가 광양**에 **4.4조원 투자** 결정

○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현장의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기업애로 해결 역량도 강화

* 예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아다니는 **'규제사냥단'**(전남), 1주 1기업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경남)** 등 활용

◆ **(상향식·기업참여 협약)** 희망지역의 경우,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규제개선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규제 발굴 후 개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검토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위한 규제개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 불편 호소

〈 지역발전투자협약 개선 사항 〉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 계획 수립후 지자체·기업-중앙부처간 협약을 통해 사업 공동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1조)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신규) 기업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방 식	• **지자체 주도** 상향식		• **기업-지방정부** 주도 상향식
협 약	• **지자체 - 중앙부처**(주관부처, 협조부처)		• **민간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행안부 등)
절 차	• **균형위 공모사업**(지자체가 다부처 묶음 사업으로 신청, 주관부처 섭외 등)	→	• 지역 내 규제발굴 체계 및 민관합동 규제협의체를 활용한 킬러규제 발굴·개선
지원내용	• 각 사업당 **국비 91억원** 지원		• **현장중심 규제개선 추진**
분 야	• 삶의 질, 공간혁신, 일자리 **분야**에 **한정**		• **지원분야 제한 없음**(중앙주도의 하향식·일괄 지원이 아닌, **상향식·타겟 중심** 추진)

◆ **(향후계획)**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규제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규제개선 추진**

* 개선과제 발굴(10월) → 규제개선 결정(~12월) (*협약체결시 지방시대委 심의)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체제 • 자치단체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제 **개별 대응으로 한계** • 권한 확대 요구에 비해 **책임성 부족**	• 기능 재조정으로 **지방주도권 강화** • 권한 확대로 지방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유연한 공동 대응** • 지방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

◆ **(과감한 권한이양)**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자치조직권*** 및 지역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23~)
  * 예시) 지방 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각종 행안부 협의 규정 폐지
- **지방-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비 추진**

◆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주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장치 확보**

- **지특회계 재원 규모** 및 포괄보조금 성격인 **지역자율계정 비중 확대, 조례로 지방세 감면** 가능한 **허용범위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 (現) 서민생활 지원 등 제한적 허용 → (개선) 「지방자치법」상 全 자치사무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검토

◆ **(자치모델 마련)**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 고도화**, 지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부여**
  *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북)글로벌생명경제도시
- 메가시티·광역경제권을 지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책임성·전문성 강화)** 지방의 책임성 장치 마련을 위해 **지방 감사기구의 기능 제고**,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지방정부의 **감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경영의 책임성 확보**
- **중앙-시·도-시·군·구** 간 **인사교류 확대** 및 **맞춤형 교육제도** 마련('23~)

03 | 지역정책과제 추진

1 지역정책과제 추진체계 구축

현재 모습 (As-Is)	지방시대 (To-Be)
• **체계적인 관리체계 없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정책과제 추진 • **부처별 분절적인 과제추진**으로 인한 전체 우선순위 미고려 등 **효과성 한계**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 등 **중앙-지방협력**을 통한 지역정책과제 추진 • **지방시대委 중심**으로 **우선순위 및 사업효과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추진 목표

-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별 현안과제**를 **조기 추진**하고 **대국민 정책 신뢰 확보**

주요 내용

- **(기본원칙) 상위계획 연계,** 우선순위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등 **기본원칙**(붙임)에 기반한 **효과적인 과제이행 지원** 추진
- **(계획반영)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관리하고, **과제 진행상황**을 고려해 **추가 반영 매년** 검토

  * 지역정책과제(255개) 중에서 시·도 우선순위 및 부처 검토 등을 통해 선정

  ** 다만, 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 예산반영 필요시 별도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야 함

- **(예산반영)** 지역정책과제 중 **'24년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추가 예산반영 매년 검토***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시도, 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기재부에 매년 검토 요청

- **(이행관리) 과제담당부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반기별 점검**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 보고**

붙임 지역정책과제 이행지원 기본 원칙

1 지역정책과제 추진과 지역발전 전략 및 국가계획의 유기적인 연계

- **지역발전전략, 국가계획, 분야별**(SOC, 산업, R&D 등) 투자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정책과제 추진**

  * 철도건설법 제4조제2항 제1호 신설('23.6월)로 향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함

2 지역 우선순위,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지역 우선순위, 재정여건,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단계별 추진**

3 충분한 의견수렴 등 중앙-지방-민간이 긴밀히 협업

- 과제관리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과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 **제고**
- **신속하고 효과적인** 과제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이행과정**에서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

4 지역 내 우선순위 변경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

- **정책 여건 변동**에 따라 **과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제내용 및 추진일정 등 조정**

5 지역정책과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체계 구축

-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담당부서에서 **과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2 분야별 중점 과제

◈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119개)을 구체화하여 발표('22.4)한 **지역정책과제 255개(17개 시·도x15개) 이행 지원** 추진

◈ 시·도별 우선순위, 부처 의견, 재정여건, 형평성,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시도별 주요과제 선정**

○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①**첨단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②**교통인프라 확충**, ③**지역 숙원사업 추진 등**을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1 첨단 신산업 육성 지원

◈ 우주, 로봇, 미래모빌리티, AI·데이터, 수소 등 미래에너지, 의료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 구축**

- **(우주)** 우주 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및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남 고흥 및 경남 사천 일대를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
- **(AI·데이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북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AI 산업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AI-산업 융합기반 조성** 등
- **(로봇·미래모빌리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에 **기술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 유치 및 사업화 지원 추진**

  * 서비스로봇,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하이퍼튜브, 드론, UAM 등

  ** (대구)서비스로봇 테스트 필드, (광주)미래차, (울산)수소차, UAM, (강원)미래 소형화물차, (충남)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북)하이퍼튜브, (전남)드론 등
- **(수소 등)**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 **수소 생산·저장·운송 거점 조성** 및 연료전지, 기자재 등 **관련 상용화 산업 유치**
- **(의료산업)** 충북, 강원을 중심으로 백신 및 신약,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임상·상용화 지원**

2 특화산업 육성 지원

◈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 문화·생태자원, 농림·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원

- **(산업자원)** 섬유산업, 원전, 과학기술 연구단지 등 **기구축된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
  * (대구)그린섬유소재산업 육성, (경남·경북)SMR중심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특화산단 조성, (대전·세종)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중점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등

- **(문화·생태자원)** 선사·역사유적, 호수·하천·습지 등 다양한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관광산업 육성 추진**
  * (경남·전남)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충남)금강·백제문화 관광활성화, (충북)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 (대구)경상감영, (울산)반구대암각화, (제주)해녀문화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등

- **(농림·해양자원)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 스마트 항만, 첨단 해양장비산업 등 **해양신산업 인프라** 구축
  * (강원)산림클러스터, (전북)식품산업클러스터, (경북)축분기반 소재산업,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등
  ** (충남)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전북)첨단해양장비산업단지, (전남)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경북)동해안 블루카본 인프라, (경남)진해신항, (제주)크루즈 모항 등

3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

◈ 촘촘한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 **(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및 무안, 서산 등 지역 공항 활성화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 **(철도)** 철도 고속화*, 동서연결철도** 및 권역별 광역철도***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철도망 구축**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등
  ** 달빛철도(광주~대구)
  *** 부울경 광역철도(부산~양산~울산),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청주) 등
- **(도로)** 강원, 충북 내륙 등 소외지역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지역 간 도로망 확충**
  * 동서고속도로(영월~삼척), 제천~영월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어상천 무인IC 설치 등

4 기타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

◈ 각 지역에서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숙원사업 추진 지원

- 2030 부산엑스포 부지 개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숙원사업 추진**
-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운영, 방위사업청 및 산업은행 이전 등도 추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III. 시·도 지방시대 계획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17개 시·도별 비전 및 목표

서울	비전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목표	▸ 5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서울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휴식이 있는 매력도시 구현
부산	비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빅 드림(BIG Dream)'부산**
	목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 첨단산업 육성·부산형복지 확대로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구현
대구	비전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
	목표	▸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
인천	비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목표	▸ 신도시와 원도심 특화 발전으로 시민 중심의 균형도시 조성 ▸ 변화와 창조를 통해 미래가치를 준비하는 경쟁력있는 도시 구현
광주	비전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기회 도시 광주**
	목표	▸ 시민 주도,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광주시대 실현 ▸ 신산업 창출을 통해 누구에게나 풍성한 성장 도시 광주 실현
대전	비전	**담대한 꿈을 현실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목표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비즈니스융합도시 구현
울산	비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목표	▸ 울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조성 및 산업 육성, 누구나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조성
세종	비전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세종**
	목표	▸ 행정수도 완성 및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육성 ▸ 창의적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세종형 한글·문화 특화 도시 구현

경기	비전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목표	▸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
강원	비전	**새로운 출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목표	▸ 5대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5대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 강원형 내부순환 고속교통망·수도권 1시간대 교통망 완성
충북	비전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충북**
	목표	▸ 창조적 혁신으로 골고루 잘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 실현 ▸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新산업을 선도하는 풍요로운 충북
충남	비전	**대한민국 성장과 나눔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
	목표	▸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역동적 경제성장 ▸ 도민의 품격 있는 삶의 질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완성
전북	비전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목표	▸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북형 특별자치 실현 ▸ 생명경제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균형발전 선도
전남	비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목표	▸ 첨단 미래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중심지 도약을 통한 남해안 광역개발 선도 ▸ 도민에게 힘이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선도교육을 통한 전남 행복시대 건설
경북	비전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경상북도**
	목표	▸ 지역 유목민시대를 넘어 지역 정주시대 구현 ▸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
경남	비전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
	목표	▸ 신기술 융합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역동하는 지역경제 ▸ 인재가 모이고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민
제주	비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목표	▸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 혁신성장, 청정산업, 특화발전으로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 시·도에서 수립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행

서울특별시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 5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서울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휴식이 있는 매력도시 구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 자치조직·자치입법·자주재원 확대를 통해 복잡·다양해진 지방 행정수요에 실효적 대응
-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 필요성 적극 건의(추진)
  -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중심지 조세감면에 대한 수도권 배제 규정 삭제 및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근거 마련 건의
  -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수도권 원천 배제 개선 (첨단산업 등 특정산업의 경우 수도권도 특구 신청가능 등)
- 재난·안전 교육, 디지털 신기술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확대로 미래 행정수요 대응 역량 강화
- '시민 눈높이'의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으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전략 2〉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기회 제공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운영

〈전략 3〉 특색있게 발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으로 혁신성장 거점 마련
  - 상암 DMC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고용기반 구축
  - 여의도 금융허브 육성 등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예술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잠실 일대를 스포츠·MICE 거점으로 육성, 문화 랜드마크 형성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디지털미디어(상암)·R&D(마곡)·IT(공릉)·바이오(홍릉) 등 지역별 특화된 과학기술 거점 육성

〈전략 4〉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 서울 뷰티트래블 위크, 서울미식주간 등 서울의 '멋과 맛' 등을 활용한 서울스타일 관광매력 강화
- 책읽는 서울광장, 사계절 서울 대표축제 개최 등 365일 활력있는 문화매력 도시 서울 조성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과 다양한 한강 관광자원 육성
- 서울시내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격차 해소 및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 도시철도 소외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 자율주행 스마트라이프 추진

〈전략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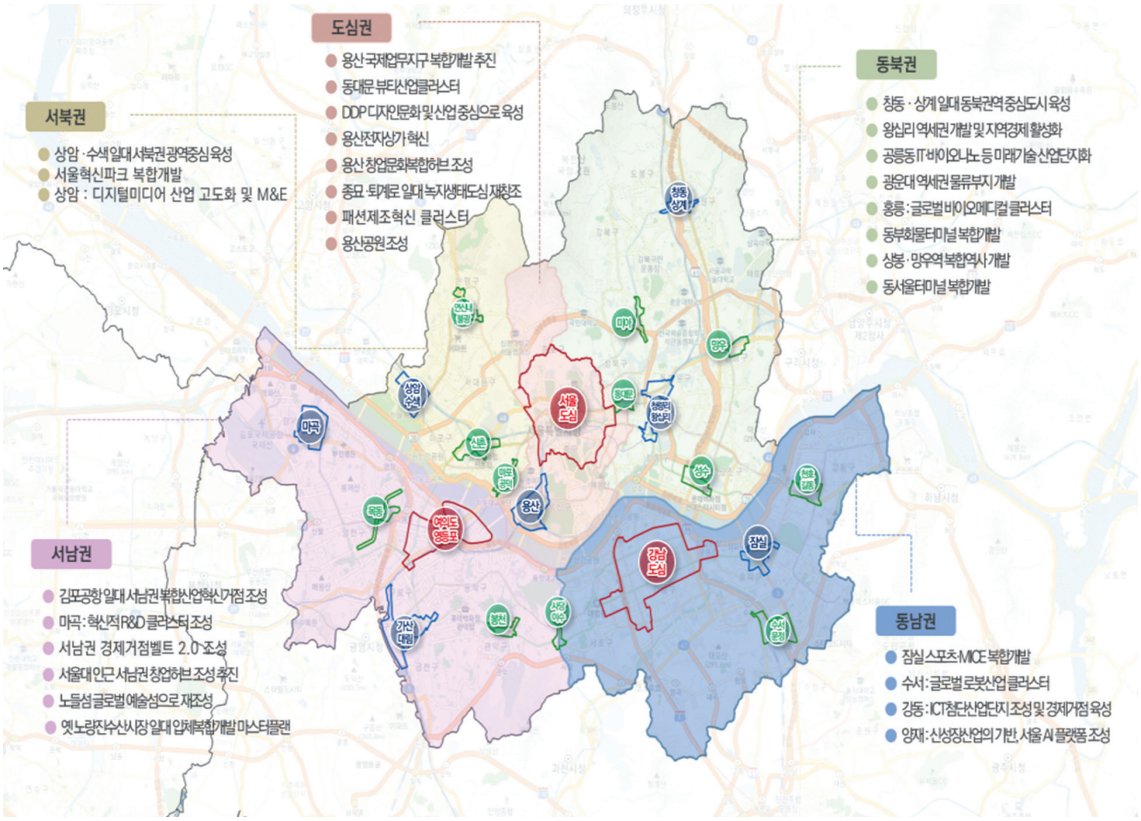
-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등 지속적 확대
- 은평병원 현대화 추진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
-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종묘~퇴계로 일대 고밀·복합개발, 서울 초록길 구축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49.7	57.5	7.8
	일자리 수	천명	5,178	5,220	42
	재정자주도	%, %p	77.2	77.2	-
자율	외국인 관광객 수	만명	417	3,000	2,583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p	52.9	65.6	12.7
	신규주택공급 물량	만호	8.0	38.0	30.0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	㎡	17.9	18.3	0.4

공간발전구상

- 5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산업육성으로 혁신성장 거점 마련
  - (서북권) 상암 DMC 중심 개발, (서남권) 서남권 거점 벨트2.0 조성, (동북권) 창동·상계 일대 개발, (동남권) 잠실 일대 스포츠·MICE 거점 육성, (도심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 그레이트한강·정원도시 서울 등 문화·여가 공간 확보로 시민 삶의질 증진



부산광역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BIG Dream)' 부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 첨단산업 육성·부산형복지 확대로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구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국가 경영 과감한 자치분권

-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시대 이양사무 발굴추진단 구성·운영
- **재정건전성 강화** : 내실 있는 재정관리 제도로 예산편성·집행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 효율화** :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
- **입법·정책 활동 지원** : 의원입법 완성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입법 활동 지원

〈전략 2〉 인재가 넘쳐나는 담대한 교육개혁

-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 : 신개념 인재양성 및 미래교육 허브를 위한 NEW 종합교원양성체제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 대학지원 전담조직 개편 및 총괄 기능 강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전략 3〉 일자리가 풍부한 창조적 혁신 성장

- **기회발전특구** : 미래신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 **도심융합특구** : 센텀시티 연계 첨단 ICT 융복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밸리 조성
-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 신형연구로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동위원소 수급 주도
-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 첨단 의료기술 도입으로 지역 의료 수준 증진 및 지역주민 의료혜택 제고

〈전략 4〉 성숙한 도시 인프라 기반 주도적 특화발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 글로벌 명소 조성·홍보로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항
-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 국내·외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한 차량용 반도체 특화 육성
-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산업은행 이전으로 금융중심지 도약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

〈전략 5〉 삶의 품격 있는 맞춤형 생활복지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가족센터 건립** :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 낙동강일원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추진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1.5	36.3	4.7
	일자리 수	천명	1,704	1,727	23
	재정자주도	%, %p	58.5	60.6	2.1
자율	1인당 지역총소득(GRNI)	백만원	33.7	38.7	5.1
	지방세 징수율	%, %p	96.6	97.1	0.5
	청년고용률	%, %p	43.2	44.9	1.7
	창업기업 수	천개	75.3	77.6	2.3
	소멸위험지역 가구 수	천가구	164.7	166.9	2.2

공간발전구상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거점 육성
-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발전 유도

대구광역시 |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

◈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자치조직권 강화 :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및 기능과 역할 등 정립
-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기금, 특별회계 정비,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전략 2〉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 지자체-대학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혁신사업(RIS)의 체계적 운영 및 지역혁신중심대학(RISE) 사업체계 구축·운영
- 대학 창업 활성화 :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창업의 전주기 지원 확대
- 지역대학 역량 강화 : 글로컬 대학 육성 추진 지역대학 지원

〈전략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혁신거점 조성 : 대구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AI·로봇 융합형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 구축 :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제2국가산단 조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K-메디허브) 조성 등
- 창업생태계 강화 : 창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성장까지 전주기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전략 4〉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 군공항 후적지 개발(New K-2, 두바이식 거점 개발)
- 지역의 창조적 역량강화 : 미래디지털데이터산업 거점도시,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등
- 청년이 어우러진 문화공간 조성 : 역사문화관광벨트 및 문화예술허브 조성, 금호강 프로젝트, 동성로 활성화 추진 등
- 신공항 연계 및 대구광역권 교통망 구축 : 대구경북선 철도, 군위군 및 K-2후적지 연계 고속도로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달빛고속철도,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구축

〈전략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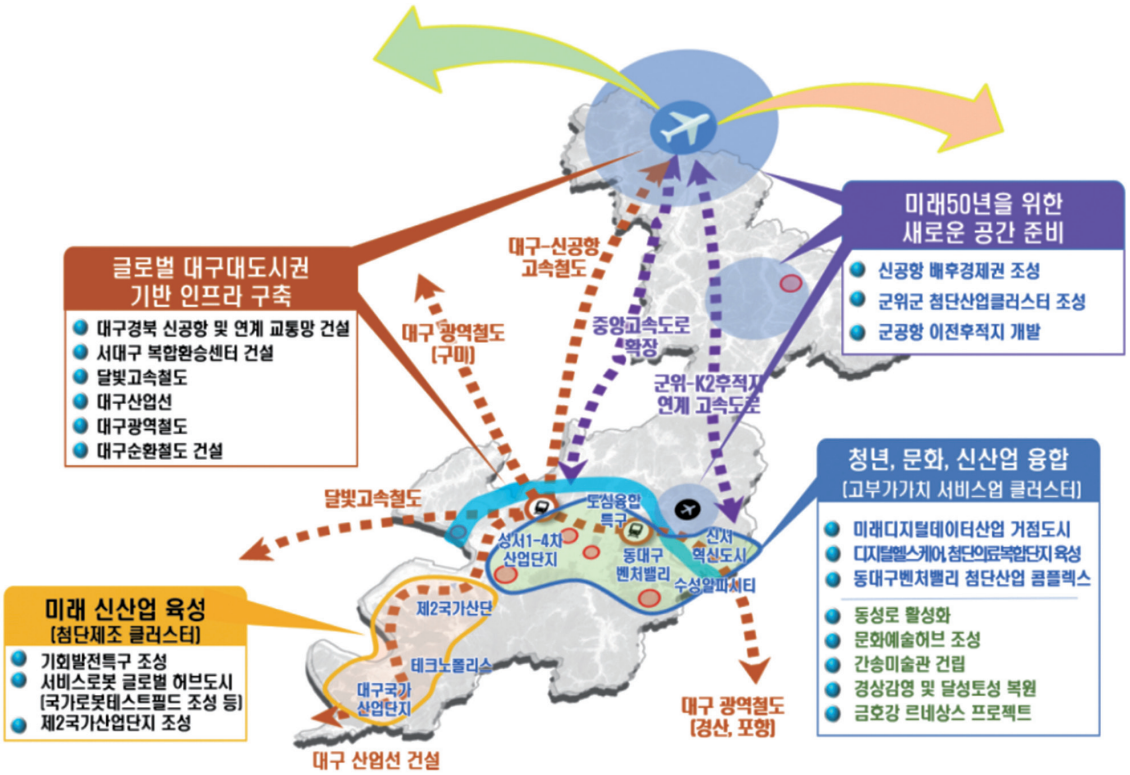
- 지역거점 조성 :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 강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다함께 돌봄서비스 지원 등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25.5	32.3	6.8
	일자리 수	천명	1,278	1,280	2
	재정자주도	%, %p	64.7	65.0	0.3
자율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	%, %p	17.4	6.0	-11.4
	청년고용률	%, %p	44.7	45.0	0.3
	창업률	%, %p	13.2	13.7	0.5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천명	15	35	20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개	14.6	16.0	1.4

공간발전구상

- 메가시티 대구 미래번영 50년을 위한 글로벌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및 관련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로봇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육성
- 대구시 중심지구와 수성알파시티(디지털혁신거점)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이는 문화와 디지털경제의 융합클러스터 조성



인천광역시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 신도시와 원도심 특화 발전으로 시민 중심의 균형도시 조성
◈ 변화와 창조를 통해 미래가치를 준비하는 경쟁력있는 도시 구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 인구, 생활권역, 정서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2군·8구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 추진(주민 84.2% 찬성)
-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 자치분권 아카데미,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시민원로회의,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 행복정책자문단 등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전략 2〉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 **지역에 특화된 산업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인프라, 무상교육·온라인교육·생활교육 확대 등 교육 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소득양극화에 의한 학력 격차 완화
-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 시민대학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배움을 공유하는 시민교수 육성으로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전략 3〉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추진** :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투자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인천내항 및 강화남단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등을 기반으로 한 세계초일류 도시 구축
-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 바이오, 반도체, AI, 미래차, 로봇, MRO, PAV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전통 산업단지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지원 강화** : 중기자금,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혁신기업 육성, 창업기업 성장 지원 및 청년 창업 기회 확대

〈전략 4〉 지역가치를 재창조하는 특화발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 인천내항 주변의 수변·역사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 및 개항장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확대, 가고싶은 K-관광섬,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등의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상품 추가발굴·개발
-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대** : GTX-B·GTX-D Y자 추진·제2경인선, 인천대로 지하화·계양강화고속도로 등 주요 거점 및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도로망 확충

〈전략 5〉 공정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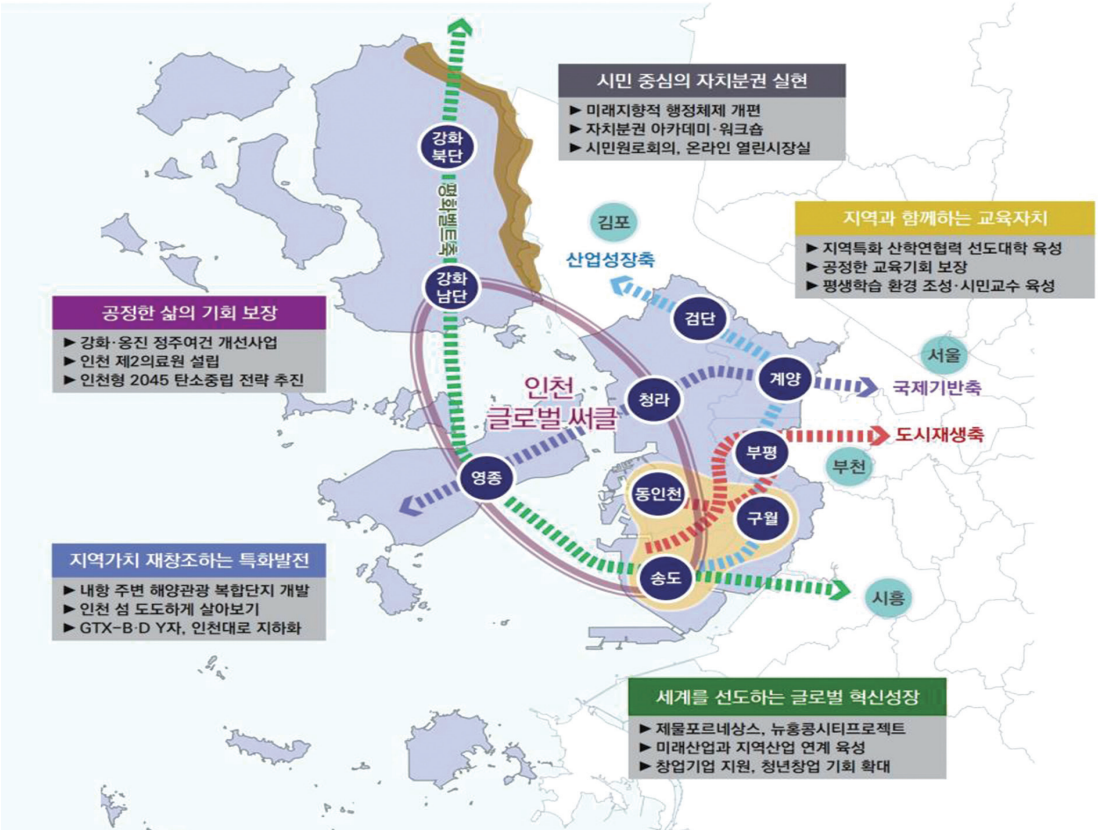
- **강화·옹진 정주여건 개선사업** : 소외된 섬지역에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지역 교통여건(여객선) 개선
- **의료자원 부족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검토, 1섬 1주치병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
- **기후위기 대응, 인천형 2045 탄소중립 전략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정부보다 5년 더 빠른 탄소 중립 및 적응대책 추진(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관리 사업)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3.6	38.0	4.4
	일자리 수	천명	1,681	1,721	40
	재정자주도	%, %p	65.0	66.2	1.2
자율	온라인 열린시장실 참여자 수	명	25,950	28,089	2,139
	공보육 이용률	%, %p	36.3	50.0	13.7
	청년고용률	%, %p	50.5	53.3	2.8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천명	4,046	6,023	1,977
	연안여객선 이용자 수	천명	1,571	1,780	209

공간발전구상

- 경제자유구역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통한 초일류도시 인천의 글로벌 써클 설정
- 쇠퇴한 원도심 및 산업단지 재생과 광역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인천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문화 및 관광, 해양도시 조성



광주광역시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기회 도시 광주

◈ 시민 주도,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광주시대 실현
◈ 신산업 창출을 통해 누구에게나 풍성한 성장 도시 광주 실현
◈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따뜻한 사람중심도시 광주 구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

- **시민주도 정책기획** :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ON',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등
- **광주·전남 상생협력 모델 구축** : 지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관광 초광역 협력으로 광주·전남 공동생활권을 조성(영산강권 협의체 구성 및 특별지자체 설립)

〈전략 2〉 새로운 교육혁신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

- **미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글로컬대학 육성** :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대학평생교육강화(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창업중심대학, AI 융복합·신기술·첨단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초격차 글로컬 혁신 대학 육성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 **성장단계별 인재양성사다리 완성** : AI영재고 설립, 반도체특성화대학, 구글 클라우드 R&D 인재협약, AI-메타버스-코딩 올림피아드 개최 등 미래산업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 체계 구축

〈전략 3〉 미래 혁신성장으로 내일을 주도하는 창업성공도시 광주

-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집적화 및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 조성(창업펀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등)
- **국가AI혁신 거점육성** :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AI 집적단지 고도화 2단계, 국가 AI데이터 센터 등 기술의 집적화와 실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AI산업 융합 생태계(K-밸리) 구축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 4〉 미래 신산업을 대표하는 신경제도시 광주

- **미래차 삼각벨트 구축** : 100만평 미래차 신규국가산단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 추진으로 미래차 전주기 산업 생태계 선점
- **미래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2대 도전산업(반도체, 데이터), 5대 전략산업(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산업 등), 2대 기반산업(광융합·가전 및 스마트뿌리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 **미래 신성장 지대 마련** :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에 근거한 이전 가속화(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종전부지는 광주의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 추진

〈전략 5〉 더 가깝고 더 두터운 돌봄도시 광주

- **광주다움 통합돌봄** : 가깝고 두터운 대한민국의 복지 표준,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면 시행(위기가구 '의무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신속 발견, 기존돌봄+틈새는 신설 7대 돌봄+긴급 돌봄까지 누수 없는 사회서비스 연계, 권역별 사례 회의 제도화 등)
- **모두의 안심도시 광주 조성** : 마을돌봄 및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제공(광주 의료원 설립),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지역상생 사업 모델(충장상상큐브), 지역산업 위기 예방 및 선제 대응 지정 등 추진으로 소외되는 시민 없는 공평한 광주 구현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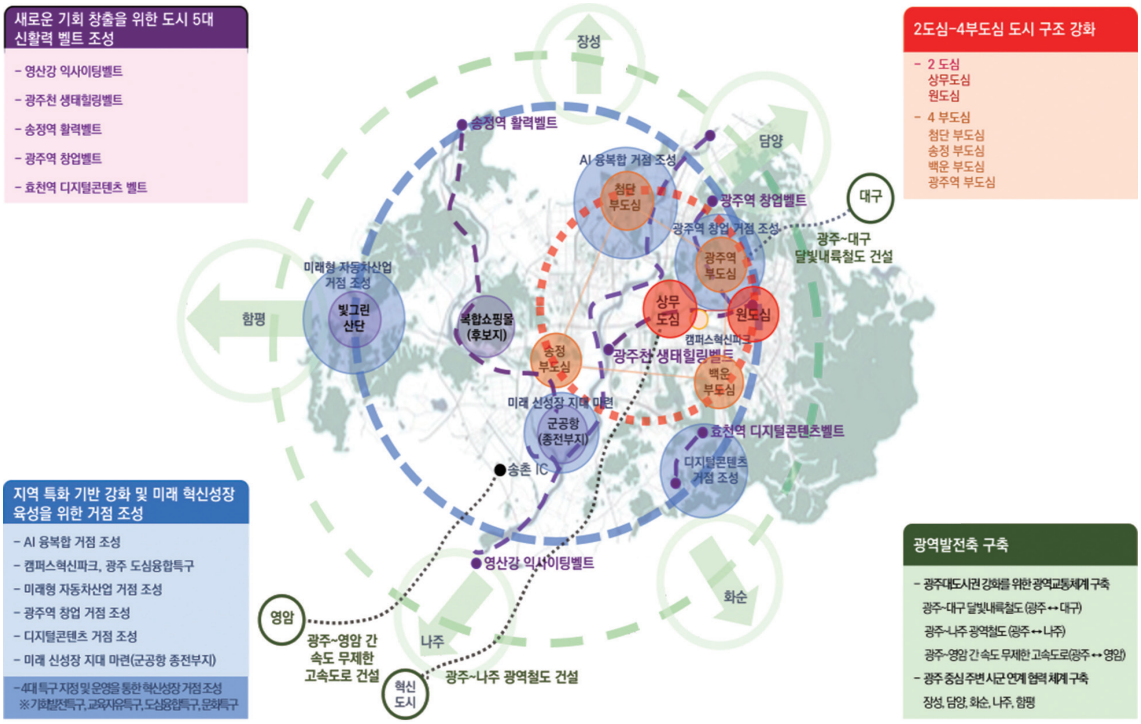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29.7('21년)	37.0	7.2
	일자리 수	천명	775	790	15
	재정자주도	%, %p	65.1	67.1	2.0
자율	글로컬대학육성	개소	1	4	3
	창업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억원	308	2,000	1,692
	미래차부품업체전환	개소	20	80	60
	AI과제수행 기업	기업수	457	900	443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	35.1	40	4.9p

공간발전구상

▸ 지역 특화 기반 강화 및 미래 혁신성장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
- 광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도시 신활력 벨트 조성
- 5대 벨트 조성 및 군공항 종전부지 그린 스마트 시티 조성 등

▸ 광주대도시권 강화를 위한 광역발전축 구축
-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준공,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



대전광역시 | 담대한 꿈을 현실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비즈니스융합도시 구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분권 도시

- **자율적 자치기반·역량 강화** : 자치행정력 제고 및 자치조직권 강화 추진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 자치경찰제 전환 추진, 충청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전략 2〉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희망 도시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처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등
-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훈련 추진**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등
- **맞춤형 종합 취업·진로 서비스 강화** : 대학 취업역량강화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등

〈전략 3〉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비즈니스융합 도시

-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시설용지 500만평+α 공급** : 제2대덕연구단지,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
- **4대 핵심전략산업+α 육성** :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양자, UAM
- **딥테크 기반의 창업생태계 구축 스케일업 확대** : 도심융복합형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등

〈전략 4〉 참여와 연대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 **문화·예술거점 공간 및 축제 등 일상적 삶이 즐거운 플래피(Play+Happy) 시티** : 0시 축제, 마음대로 예술공간 확대, 상시 공연 및 전시지원 사업 등
- **공공시설 정비, 체육시설 조성 등 모든 세대를 위한 개방된 생활 SOC 확충** : 학교·공공청사 시설 복합화,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전략 5〉 공정한 기회 제공의 균형발전 도시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환경 조성** : 명품정원도시 조성,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등
- **정주환경 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도시재생사업, 대전형통합돌봄 등
- **충청권 연계를 통한 도시 중심성 강화** : 혁신도시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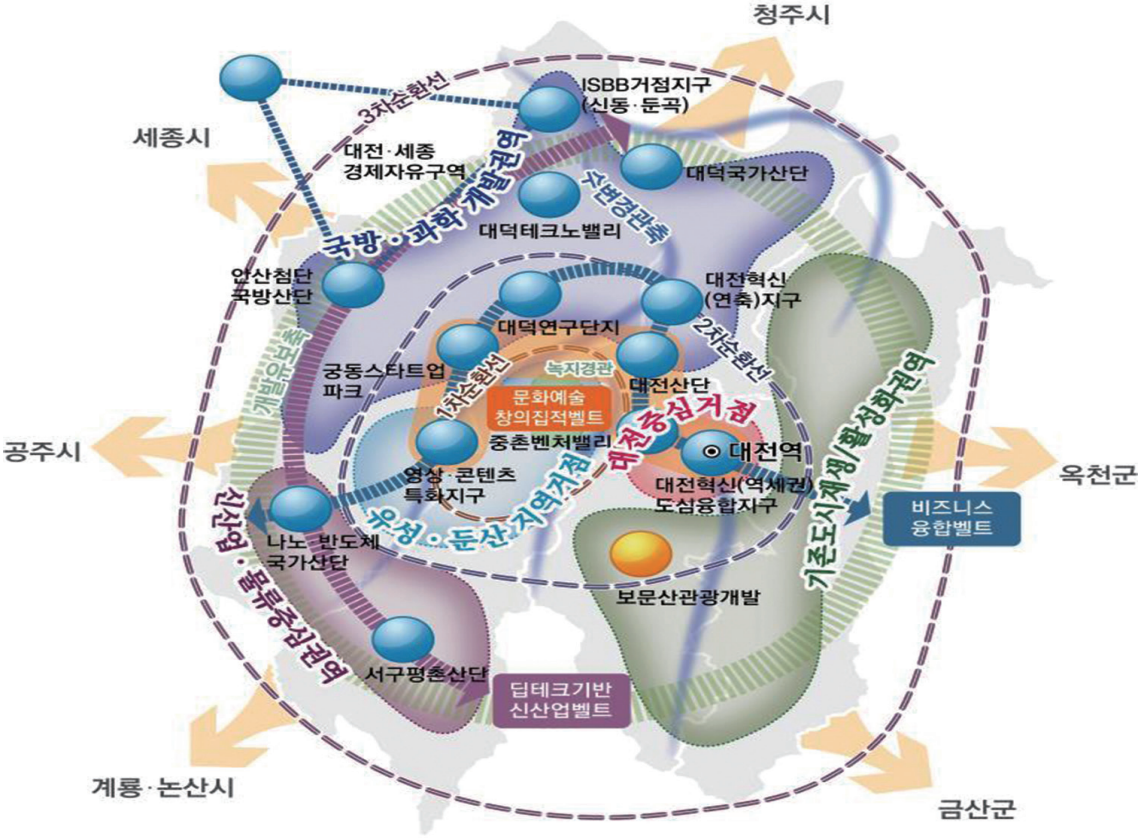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1.6	42.5	10.9
	일자리 수	천명	788	988	200
	재정자주도	%, %p	64.6	71.1	6.5
자율	창업기업 수	개	2,901	6,000	3,099
	외국인직접투자(FDI)	백만달러	3,953	4,453	500
	주택보급률	%, %p	97.0	102.5	5.5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	㎡/인	6.30	10.0	3.7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년	57	43	-14

* 1962~2022년까지 누적 FDI 실적

공간발전구상

- 딥테크기반의 신산업축 육성과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융합축 강화
-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플래닛, 문화예술 창의집적지구 조성



울산광역시	– 이제는 지방시대, 자율·공정·연대·희망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 울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조성 및 산업 육성, 누구나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조성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생활 기반 마련

-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지정
- 新울산4.0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조성
-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 원자력안전 관련 재정 확보 추진

〈전략 2〉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 글로컬 대학 육성, 국립종합대학 울산 이전유치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동남권 융합기술교육원)

〈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 **혁신성장거점** :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확장, 규제자유특구, 산학융합지구(R&D 특화), 첨단투자지구, 스타트업·캠퍼스 혁신파크 등 추진
- **주력산업 고도화** : 자동차(전기차·수소차), 조선(스마트그린쉽), 비철(소재부품), 석유화학(RUPI)
- **미래 신산업 육성** :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메디컬·화학),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반도체 사업

〈전략 4〉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 **문화산업** : 법정 문화도시 조성, K-pop 사관학교, 울산 공업축제
- **관광산업** :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관광산악특구(영남알프스), 관광해양특구(강동·일산·진하), 산업관광(산업시설관람),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이예로, 농소~강동), 도시철도(트램) 1·2호선 건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제2명촌교 건설

〈전략 5〉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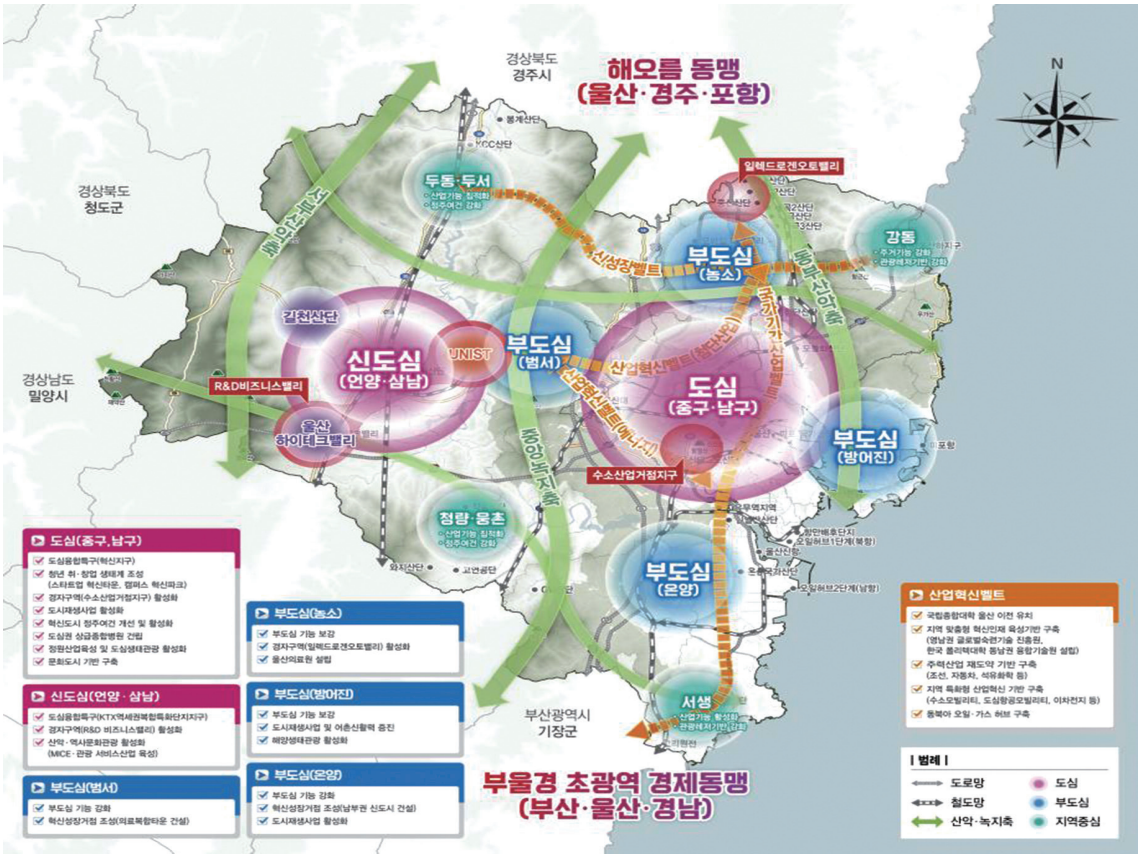
- **의료인프라**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UNIST 의과학원 설립, 도심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지정 추진
- **환경·생태자원 보전** : 울산시민의 맑은 물 확보,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71.5	75.9	4.4
	일자리 수	천명	577.2	624.3	47.1
	재정자주도	%, %p	68.0	68.7	0.7
자율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건	2	10	8
	지역대학 취업률	%, %p	61.1	75.9	14.8
	전년대비 사업체 증감률	%, %p	2.0	3.0	1.0
	대중교통수단분담률	%, %p	12.0	16.0	4.0
	전기자동차 누적보급대수	대	12,100	42,100	30,000

공간발전구상

- 도심권과 신도심을 연계해 산업혁신벨트(첨단산업·에너지 산업) 구축
- 국가기간산업벨트 고도화, 두동·두서~농소~강동을 연계해 신성장벨트 구축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동맹 등 광역경제권 형성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세종

◈ 행정수도 완성 및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육성
◈ 창의적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세종형 한글·문화 특화 도시 구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 자치분권 도시,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화형 지방주도적 발전모델 마련** : 특별자치시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세종시법 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 2〉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도시, 세종

-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대학 육성
-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지방시대를 선도할 거점대학 육성** :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략 3〉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혁신성장 도시, 세종

-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 :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역투자촉진
- **디지털트윈, 미래모빌리티 등 세종형 혁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도시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등 추진
-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및 지역발전 선도** : 벤처밸리·스마트그린·복합·전동 일반산업단지 및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

〈전략 4〉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 세종

-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등을 통한 자생적 창조역량 및 자족기능 강화** : 글로벌청년창업빌리지(例: 양자기술창업 허브공간 퀀텀빌리지) 조성,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 **한글, 금강(비단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관광기반 구축 및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한글문화단지 및 4대 관문 조성,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세종 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세종 문학관 조성
-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 및 미래전략수도에 걸맞은 도로 교통망 구축**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서울·세종-청주 고속도로, 대중교통 확산 인센티브제

〈전략 5〉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회의 도시,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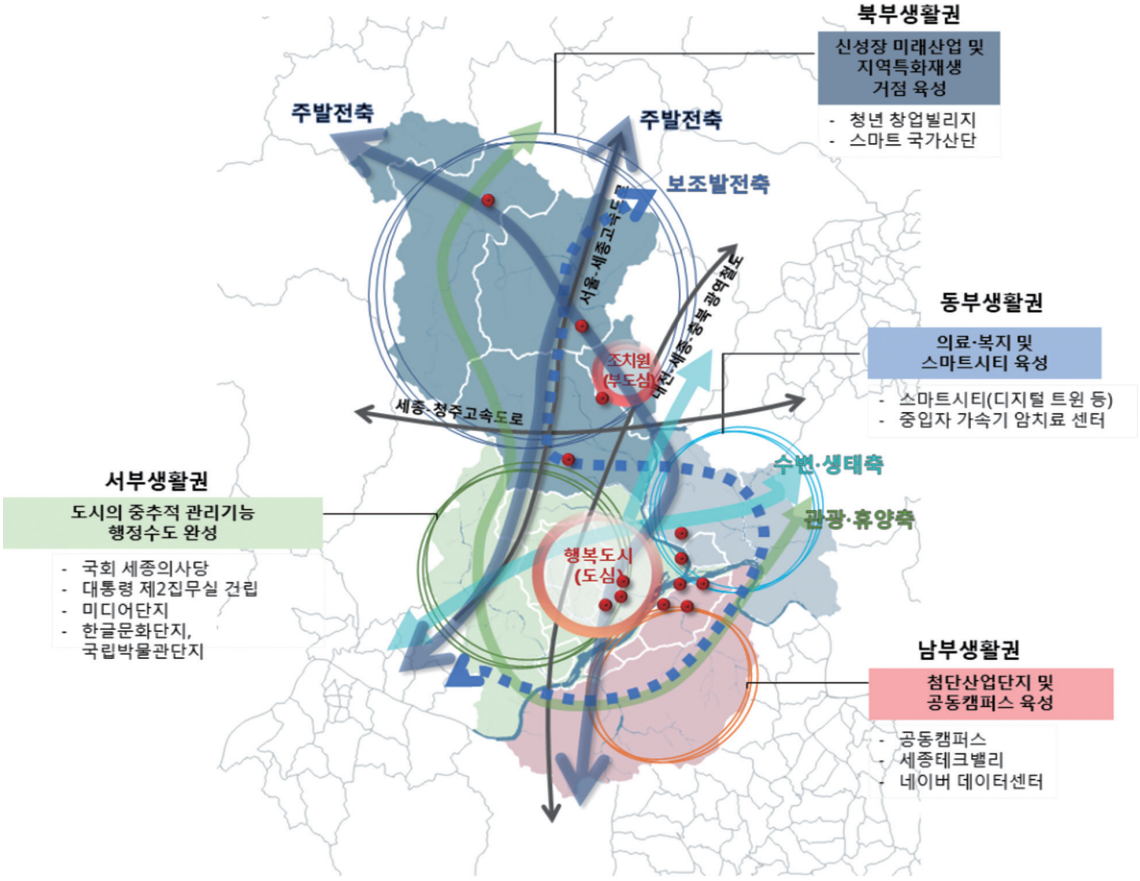
-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완성 기반 조성** :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주민주도의 특성화된 미래마을 조성** : 세종 미래마을 조성(빈집 정비 등),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 **저출산에 대응하는 세종형 보건·복지체계 강화 및 중부권 의료 허브도시 도약** :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8	40	2
	일자리 수	천명	211	230	19
	재정자주도	%, %p	63.5	65.5	2.0
자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건수	건	48	53	5
	전년대비 사업체 수 증가율	%, %p	15.0	17.0	2.0
	관광객 수	천명	1,680	1,800	120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인원	명	1,023	1,043	20
	공공보육 이용률	%, %p	57.2	59.6	2.4

공간발전구상

- (북부) 신성장 미래산업·지역특화재생 거점
- (남부) 도시첨단산업·공동캠퍼스 육성
- (동부) 의료·복지 및 스마트시티 육성
- (서부) 도시관리·행정수도 기능



경기도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 체계 마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 경기 북부의 독자적 발전 도모 및 평화 공존 시대 준비
- **도민 발안제 활성화** : 도민 발안 시스템을 활용한 도민의 입법 참여권 보장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제안 공모사업 확대 추진

〈전략 2〉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 환경 조성

-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행** :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현지 문화체험 기회 제공
- **경기 청년 갭이어 운영** : 청년의 관심분야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략 3〉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충

-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경기국제공항 추진** : 첨단산업 기반 인적·물적 교류 허브 역할
-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

〈전략 4〉 지역이 구상하는 발전 계획 지원

- **1기 신도시 재정비** : 노후화된 도시의 체계적·광역적인 재정비사업 추진
-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추진** :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GTX 확대 추진
- **철도 교통망 확충** : 통근 시간 1시간 절감을 목표로 철도 분야 인프라 확충

〈전략 5〉 일상이 평화로운 생활 여건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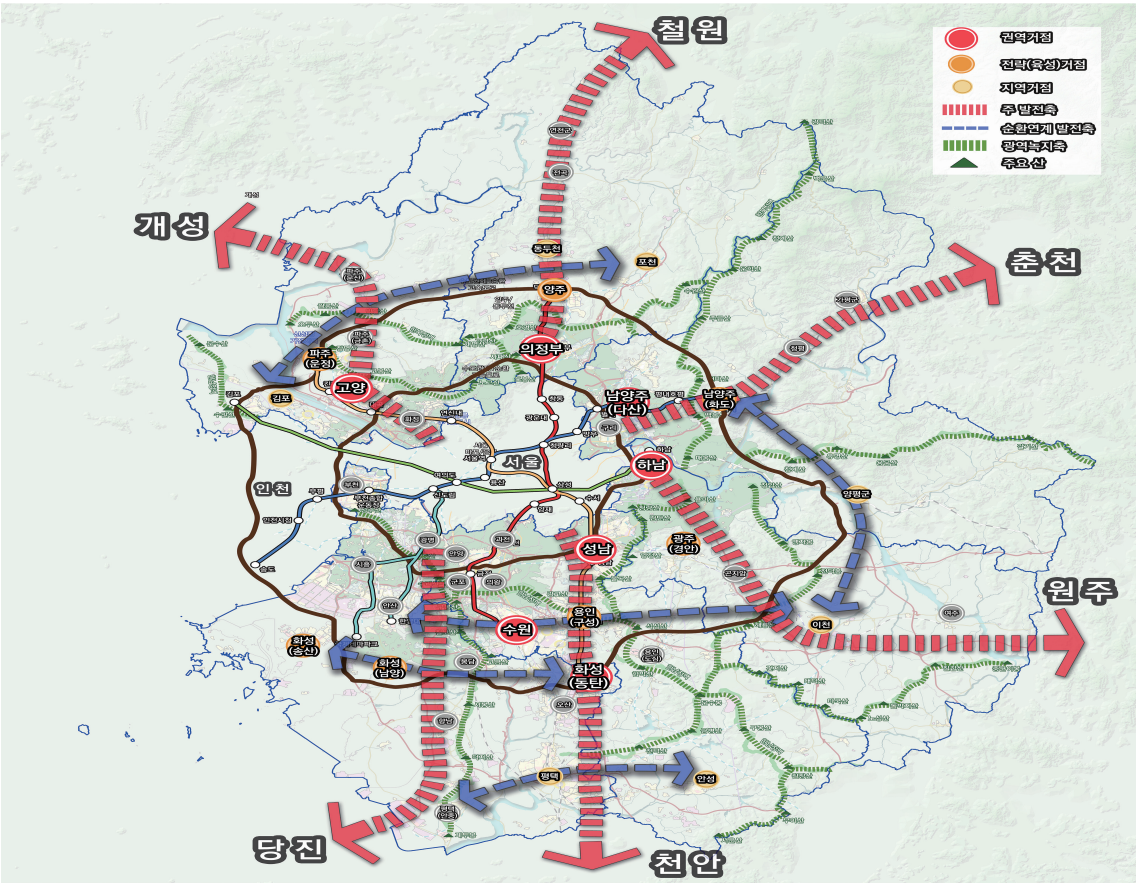
-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로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탄소중립(RE100) 달성** : 건축, 도시, 교통, 산업, 환경 분야 탄소 배출원 통합 관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8.9	41.5	2.6
	일자리 수	천명	7,731	8,500	769
	재정자주도	%, %p	69.1	72.5	3.4
자율	참여자 만족도	%, %p	90	90	0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조성	식	착공	조성	1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단지	170	170	0.0
	탄소중립 펀드조성	억원	300	1,200	900
	공공보육 이용률	%, %p	57.2	59.6	2.4

공간발전구상

- 사람과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조성
-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 달성



강원특별자치도	새로운 출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5대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5대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 강원형 내부순환 고속교통망·수도권 1시간대 교통망 완성
◈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환경 구축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한 자치분권 선도

-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 : 첨단·해양산업, 첨단방위산업 등 미래산업 특례 발굴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자주재정 및 재정분권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의 세수확보 실현
-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을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

〈전략 2〉 교육자치확대와 지역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육성

- **국제학교 설립** : 국제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특례 반영 및 국제학교 유치 추진
-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대학 육성** : 데이터, AI 중심 미래 대학모델 구축
- **교육자치 확립으로 우수인재 육성** : 초등돌봄 서비스(늘봄학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

〈전략 3〉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산업벨트 특화산업 육성

- **5대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생물·생명자원
- **SW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 : 관광산업과 SW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추진** : 강소특구 육성 및 신규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전략 4〉 지식기반 지역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 **5대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 국내·외 관광객 니즈에 부합하는 거점별 글로벌 관광지대 전환
- **강원형 교통망 완성** : 동서남북축 연결 고속도로, 수도권 1시간대 광역교통망, 도내 거점 연결 순환철도망
- **고부가가치 중심 농식품 산업구조 전환** : 신품종 R&D 기반 조성,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등

〈전략 5〉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삶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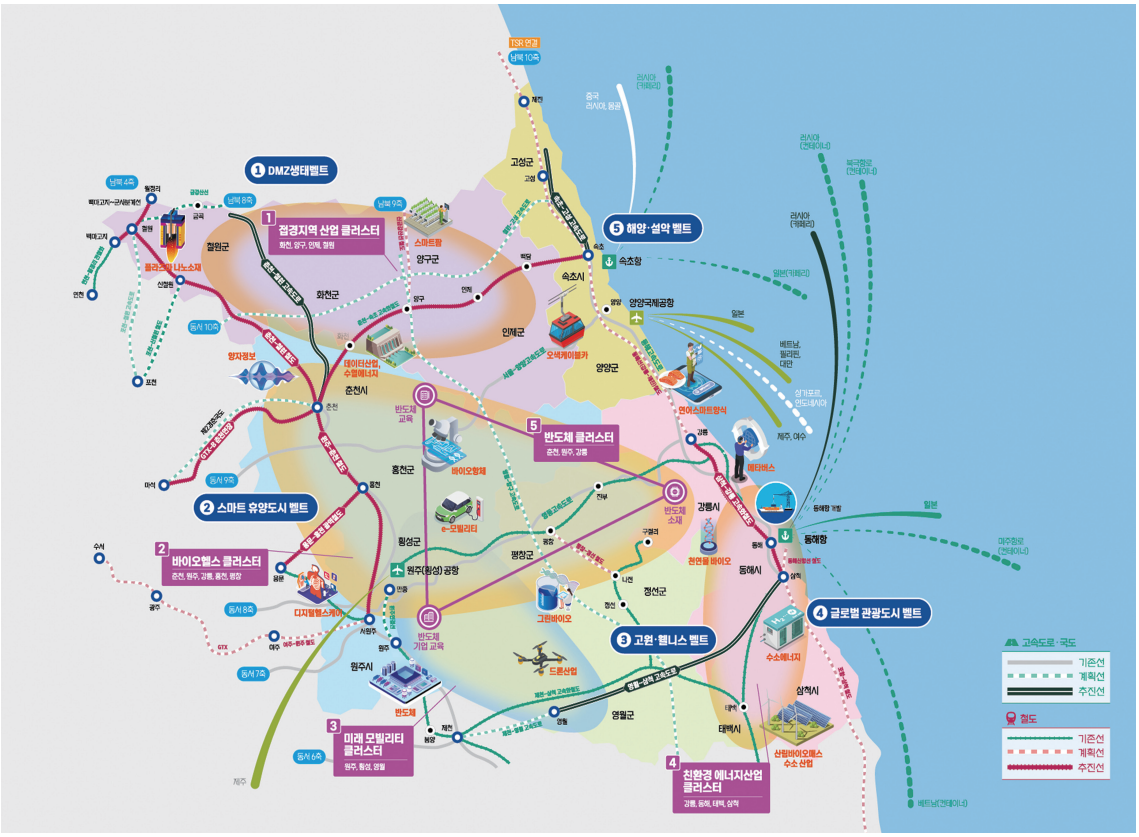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폐광·접경지역 지역개발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
-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지역거점 조성** :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3.7	40.6	6.9
	일자리 수	천명	867	898	31
	재정자주도	%, %p	72.8	74.8	2.0
자율	특별자치도 특례 수	건	67	110	43
	글로컬 대학 수	개교	0	3	3
	사업체 증감률(최근 3년 평균)	%, %p	3.6	7.0	3.4
	관광객 수	만명	15,851	18,050	2,199
	생활인구 수	만명	197	202	5

공간발전구상

- 5대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 강원형 내부순환 고속교통망·수도권 1시간대 교통망 완성
-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환경 구축



충청북도 |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충북

◈ 창조적 혁신으로 골고루 잘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 실현
◈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新산업을 선도하는 풍요로운 충북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 자치조직권 강화 노력,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충북형 자치경찰제 추진 등

〈전략 2〉 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융합형 충북인재 양성

-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 :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국제학교 설립, 글로컬 대학 육성
- **체계적 교육혁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자율형공립고 2.0 등

〈전략 3〉 기회를 만드는 창조적 혁신성장

-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 : 이차전지·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산업 육성,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 첨단바이오 R&BD 실증센터 건립, K-화장품 종합지원센터 핵심 지원 시설 구축, 양자산업 선점 등 추진
- **투자 활성화** : 기회발전특구 지정, 첨단 우수기업 60조 투자 유치,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전략 4〉 신뢰와 공정을 기반으로 한 주도적 특화발전

- **글로벌 혁신메카 조성** : K-바이오스퀘어 조성(KAIST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오송 원헬스 융복합센터 구축, 바이오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융복합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 조성 추진
- **교통·물류망 인프라 구축** :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가속화,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등 도로망 조기 추진,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 **지역자원 기반 특화 문화·체육·관광 육성** :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내륙권 연안 특화 관광명소 조성, 유휴 자산 문화재생, 충주 국가정원 조성 추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청남대 관광 명소화

  * 수자원, 산림자원, 폐자원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충북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

〈전략 5〉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추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의료비 후불제 시행 추진, 충북 북부권 상급 종합병원 설립 추진
- **환경·생태자원 보전 및 활용** :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수소경제 신산업 육성, 미호강 맑은물 사업, 지방정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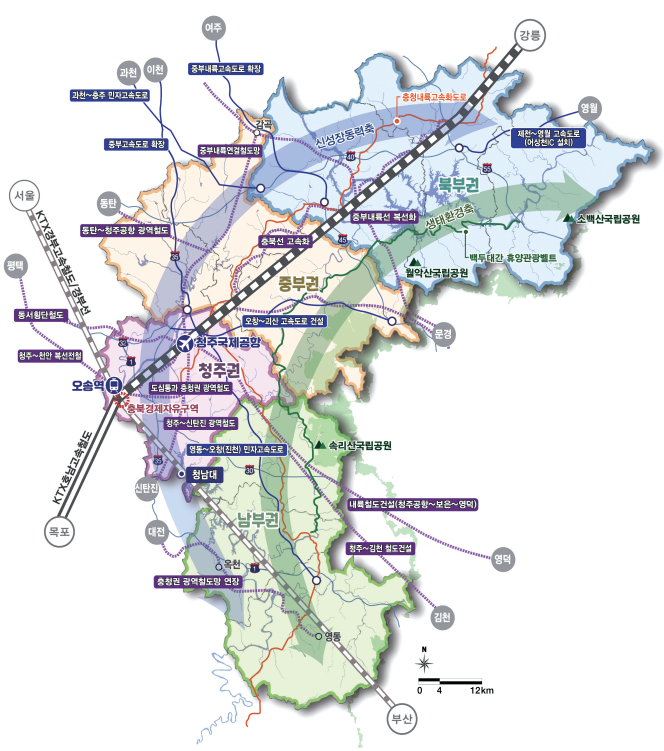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46	55	11
	일자리 수	천명	948	978	30
	재정자주도	%, %p	68.6	68.8	0.2
자율	투자유치실적	조원	35	60	25
	고용률(15~64세)	%, %p	69.3	72.5	3.2
	관광객 수	만명	2,736	5,000	2,264
	농가소득액	천원	41,568	55,000	13,432
	오송역 연간 이용객 수	만명	950	1,100	150

공간발전구상

- K-바이오스퀘어, 반도체, 이차전지, 방사광가속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축
-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축
-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등 주요 교통거점 인프라 확대를 통한 세계적 관문으로 육성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 충북



북부권

충주	· 생태정원도시 조성(국가정원) · 청정 그린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제천	· 제천 제4산업단지, 제5산업단지 건설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단양	· 단양 시루섬 관광단지 조성 · 단양레저스포츠도시 조성

중부권

증평	· 스마트 미래 농업 및 푸드테크 거점 조성 · 바이오(B)·반도체(I)·2차전지(G)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진천	· 수도권내륙권 광역철도 조기착공 · 뉴웨이브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조성
괴산	·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지방정원+복합리조트건설) ·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단지 조성
음성	· 에너지·스마트농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중부내륙철도 지선(감곡~혁신도시) 건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청주권

청주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 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 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남부권

보은	·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옥천	·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
영동	·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충청남도 | 대한민국 성장과 나눔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

◈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역동적 경제성장
◈ 도민의 품격 있는 삶의 질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완성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지역이 중심되고 도민이 행복한 실질적 자치분권

-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중앙권한 지방이양 발굴
- **상향식 자치모델 개발** :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구상,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 **주민주도 민주주의 강화** : 주민자치회 활성화, 도민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 확대

〈전략 2〉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

- **충남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 우수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대학 내 계약학과 신설, 도↔기업↔대학 상설 협의체 운영, 지역색을 살린 글로컬 대학 육성
- **교육격차 해소** :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 지역·학교 협업의 초등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도민 생애주기와 연계한 평생 학습권 보장,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전략 3〉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 유치로 힘찬 경제 성장

- **미래전략산업 육성** : AI기반 미래차 및 메디바이오 산업육성, 그린 K-UAM 실증기반 조성,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 등 추진
-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조성, 탄소중립 도시(내포) 육성
- **사통팔달의 교통·물류망 강화** : 충청 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중부내륙지역 광역입체교통망 확충, 서산공항 건설, 태안 고속도로 건설, 다목적 보령신항 완공 추진

〈전략 4〉 지리·문화적 특색을 살린 지역주도 특화발전

-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 : 백제문화권 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국제적 관광벨트 조성
-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 메카 구축** : 해양치유센터 건립, 마리나 산업 육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생태루트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워케이션 충남 구축
- **내포혁신도시 발전** : 공공기관 이전 추진,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발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전략 5〉 서로 나누고 함께 누리는 안전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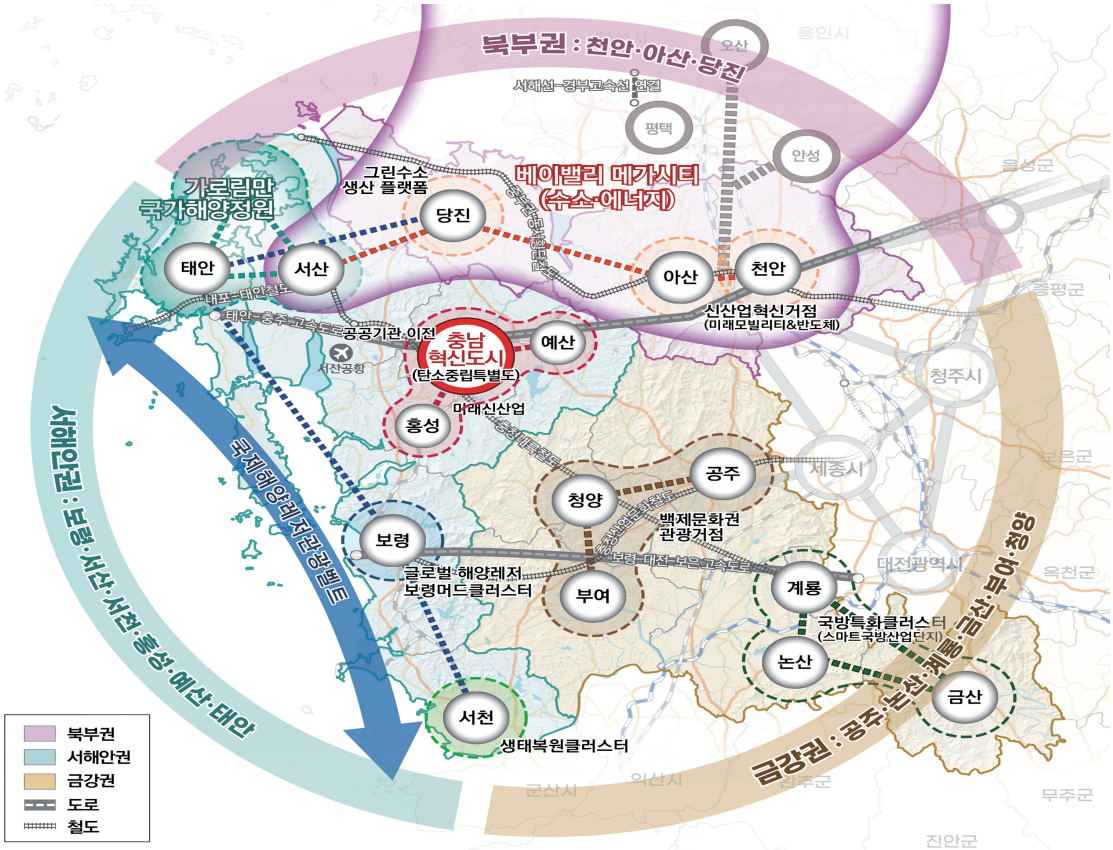
- **늘 곁에 있는 사회 복지망** :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긴급돌봄강화, 충남 맞춤형 리브 투게더, 섬 주민 이동권 확대, 아동전용 1,000원 식당 운영
-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보육료 합리적 조정, 돌봄체계 확립
- **사각지대 없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 : 재난전문 국립 경찰병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의과 대학 신설 건의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추진 등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57.6	59.9	2.3
	일자리 수	천명	1,274	1,334	60
	재정자주도	%, %p	68.3	70.0	1.7
자율	도민참여예산 반영률	%, %p	24.3	29.0	4.7
	청년고용률	%, %p	45.9	48.5	2.6
	기업유치건 수(연간)	건	785	800	15
	여행지별 1회 평균 지출액	천원	94	117	23
	최저주거 미달 가구 비율	%, %p	3.9	3.6	-0.3

공간발전구상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베이벨리 메가시티
- 홍성, 예산 : 충남혁신도시
- 서산, 태안 : 국가해양정원
- 논산, 계룡, 금산 : 국방특화클러스터
- 공주, 부여, 청양 :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전라북도 |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북형 특별자치 실현
◈ 생명경제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균형발전 선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자주, 자립, 자강의 특별자치 전북

- **특례 지속 발굴 및 권한 이양** : 실질적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례 발굴 추진
-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강화 방안 마련
-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및 지출 모니터링 강화, 기관과 기업 간 협업 확대 등

〈전략 2〉 인재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요람 전북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전북교육청과 전북도 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 해소,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공동연수과정 운영
- **전북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전북-대학 간 협력 확대와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과 지역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발전의 기회로 활용
- **전북 맞춤형 교육자치 역량 확보** :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및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농촌유학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으로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견인

〈전략 3〉 일자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엔진 전북

-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혁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 기존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탄소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실증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하여 수소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대
- **지역창업·벤처투자 인프라 및 지원 확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북 그린 스타트업 타운 및 전북 벤처창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실질적 창업생태계 구축

〈전략 4〉 도민과의 약속, 차별화된 특화 발전 전북

-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 및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으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 **K-문화관광 거점 조성** : 문화도시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K-치유관광, 생태문명원 조성 등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육성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

〈전략 5〉 활력 넘치는 사람 살기 좋은 전북

- **활력있는 새만금 도시조성** :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도시조성 여건 마련
- **지역거점 조성** :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 **전북형 의료·복지체계 확립**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전북권역 재활센터 설립, 사회보장 특구 조성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1.2	38.5	7.3
	일자리 수	천명	1,000	1,100	100
	재정자주도	%, %p	67.1	75.0	7.9
자율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	순위	9	7	-2
	청년농부 육성	명	500	3,000	2500
	문화도시 지정	개소	3	7	4
	광역교통시설도입 시·군	개	0	3	3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_2 eq	24,852	17,726	-7,126(-28.7%)

공간발전구상

- 3대 축 : 연계발전축, 동서상생협력축, 글로벌성장축
- 4대 벨트 : 신산업성장동력벨트, 농생명혁신벨트, 치유힐링벨트, 해양레저벨트
- 5대 거점 :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전라남도 |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 첨단 미래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중심지 도약을 통한 남해안 광역개발 선도
◈ 도민에게 힘이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선도교육을 통한 전남 행복시대 건설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도민의 삶이 바뀌는 자치분권 실현

-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시·군 특례발굴** : 규제권한이양, '특행기관'이관 추진 검토, 시군 특례발굴 TF 구성·운영 등
- **지방 재정력 강화** :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주재원 확대,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지방세 감면조례 활성화 등
- **특별자치도(에너지 등) 실행전략 마련** : 특별자치추진반 구성 및 지원조례제정,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특례 부여

〈전략 2〉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인재 육성

- **지방대학의 교육혁신 역량 강화** : 그린스마트 스쿨(환경친화·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 지역특화 창의인재 육성, 수요기반 융복합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
- **지역특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세계적인 글로컬 대학 육성
-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육성** :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 호남 청년 리더 육성,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 청년을 위한 전남형 만원 주택 1천호 건립 등

〈전략 3〉 지역에 활력을 불어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기회발전특구 조성** : 이차전지산업 등 전략산업 기반 기회발전특구 지정·활성화
- **최첨단 미래 전략산업 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등 추진
-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 :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RE100) 집적화 단지 구축,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신산업 5대 분야 육성 등 추진

〈전략 4〉 전남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기반한 글로벌 전남 실현

- **농·수·축산업 산업시설 스마트화** : AI첨단농산업·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친환경 K-푸드 기반 및 수출 플랫폼 구축
- **세계속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 **SOC 확충으로 미래발전 동력 확보** : 서남권 SOC 新프로젝트(전남형 트램, 광주~영암 아우토반) 추진,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구축,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

〈전략 5〉 감동주는 맞춤복지,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건설

- **도민에게 힘이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자립을 도와주는 행복일자리 지원, 스마트기술 활용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 의료 인프라 확충 등
-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 의료 취약지 간호·복지 인력지원 확대, 섬주민 건강지킴이 친환경 병원선 건조 등
- **도민 생명권·건강권 확보**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건의,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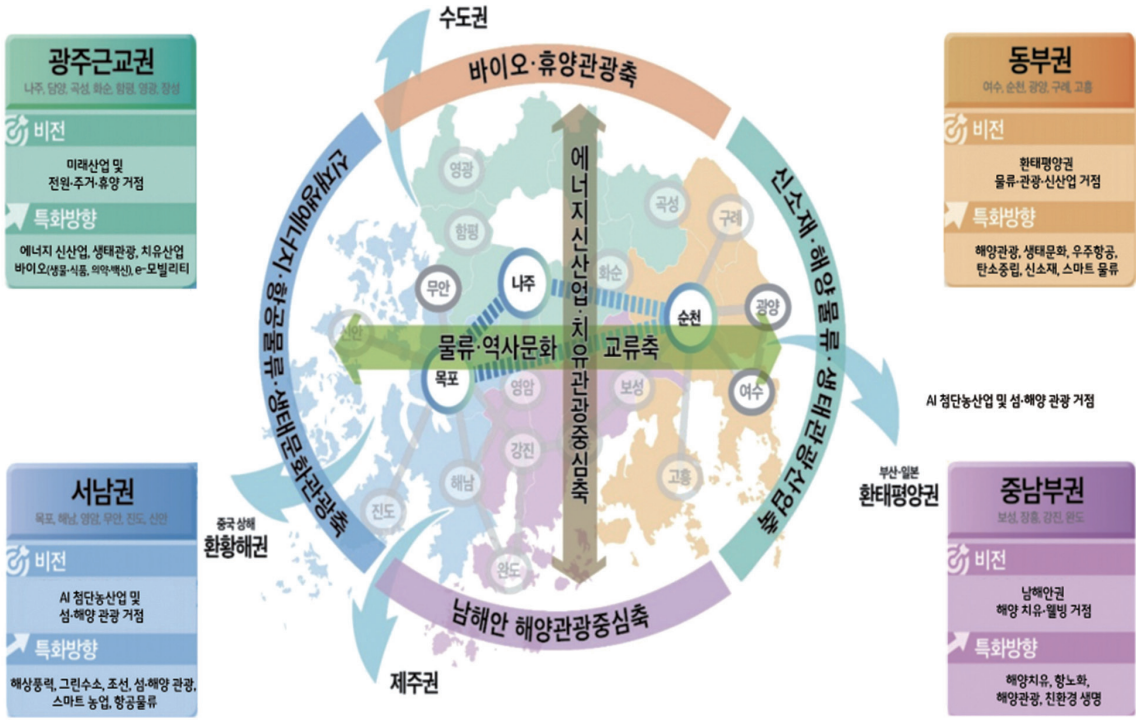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49.6	59.9	10.3
	일자리 수	천명	1,030	1,058	28
	재정자주도	%, %p	67.7	69.9	2.2
자율	재정자립도	%, %p	23.9	27.3	3.4
	삶의 질 만족도(100점 만점)	%, %p	40.9	42.9	2.0
	제조업체 수	개소	17,417	21,931	4,514
	청년고용률	%, %p	46.6	49.3	2.7
	응급의료시설 취약인구 비율	%, %p	34.1	28.0	-6.1

공간발전구상

-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확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순천정원도시 조성,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국립 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살고싶은 농산어촌 조성
  - 강소도시권 육성, 도시재생 연계 거점도시 고차서비스 시설 공급, AI첨단 농산업 거점도시, 친환경·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친환경 K-푸드 기반 및 수출 플랫폼 등), 어촌뉴딜 300 등
-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비전 제시

【광주근교권】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휴양 거점
【동부권】환태평양권 물류·관광·신산업 거점
【서남권】환황해권 AI첨단농산업 및 섬·해양관광 거점
【중남부권】남해안권 해양 치유·웰빙 거점



경상북도 |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경상북도

◈ 지역 유목민시대를 넘어 지역 정주시대 구현
◈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

- **컨설팅 중심의 플랫폼 행정체계 전환** : 경북 22개 시 · 군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조직으로 경북도의 역할과 기능 전환
- **플랫폼 정부를 위한 차등이양특례 도입** : 지역 정책분야에 대한 차등적 권한 강화
- **지역 강점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추진** : 특행기관-지방 간 유사·중복기능 정비 및 특행기관 설치 기준 강화, 지자체-특행기관 간 협업 제도화

〈전략 2〉 아이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과감한 교육개혁

-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 지역 전략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 시군-대학-기업 인력양성체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지역 대학 교육 경쟁력 확보
- **해외인재 1만명 유치** :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지역특화형비자 추진, 광역비자제도 마련)

〈전략 3〉 제조업벨트에서 첨단산업벨트로 구조전환

-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 경북형 동반자패키지인 굿프렌즈팀 가동, 첨단산업 중심 기업수요 확보, 인력양성(사내대학, 창업퍼시픽밸리), 정주여건, 개방형 인프라 등을 조성
- **글로벌 첨단산업벨트 구축 프로젝트** : 국가산업단지 조성(경주, 안동, 울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구미, 포항) 조성
-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를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 신규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의 추진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 국내 최대규모 초실감 가상촬영 인프라 구축

〈전략 4〉 케이-로컬(K-Local)로 주도하는 경북 특화발전

- **K-로컬 7대 패키지** : 등록금 무상지원, 대기업 수준 임금 보전, 10년간 주거 무료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4대 패키지, 출산 · 보육 · 돌봄 3대 패키지 등 생애주기별 지원
- **경북형 농업대전환** : 지주를 주주로, 스마트팜,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 등
- **경북 특화형 라이프케어 관광시대** : 먹고, 놀고, 자는 정주형 관광 구현

〈전략 5〉 지역위기를 대비하는 선순환 환경 조성

- **범지방지역소멸협약회의 신설 및 범정부지원체계 구축**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범지방협력체계 구축, 범정부의 지원체계 마련
- **경북형 글로벌 선진 재난시스템 구축** : 지진, 산불,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最大 대응체계 (최대 대피, 최대 예방, 최대 지원, 최대 복구) 구축
- **경북형 응급의료 골든타임 프로젝트** : 닥터헬기 등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 **산림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 :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국립산지생태원 목재자원화센터 등 설립, 산림레포츠 등 산림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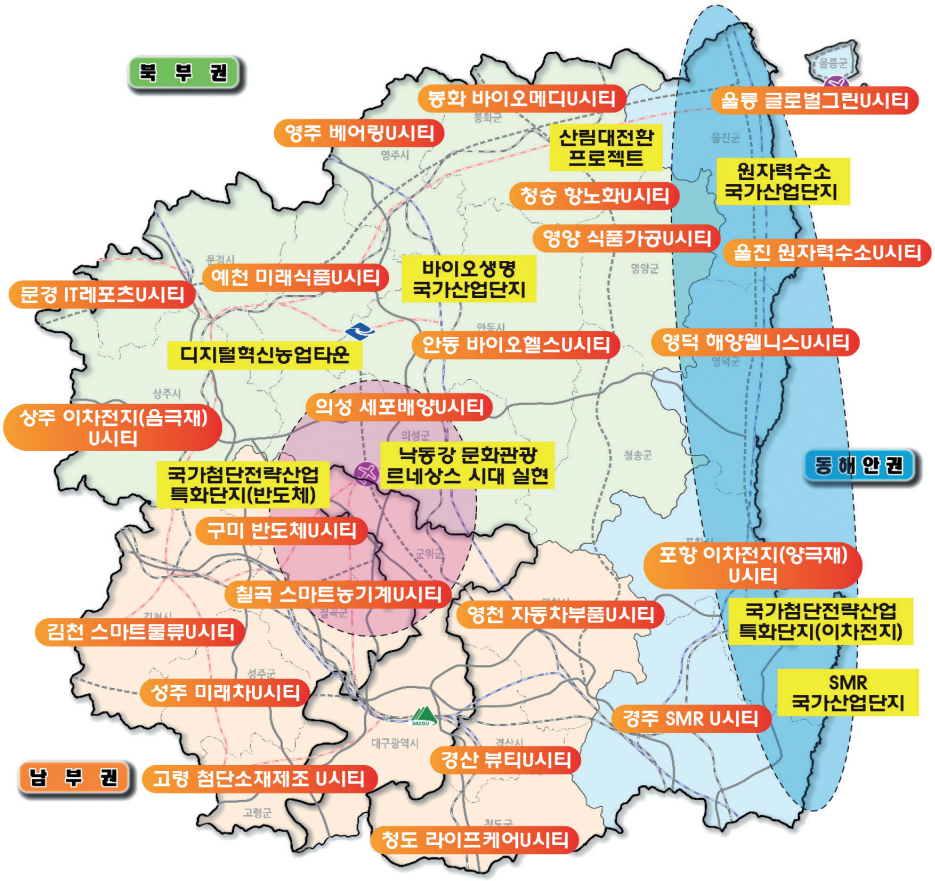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42.9	49.5	6.6
	일자리 수	천명	1,466	1,541	75
	재정자주도	%, %p	70.7	78.0	7.3
자율	중앙-지방 간 세입 배분	%, %p	27.6	28.7	1.1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 %p	66.5	70.5	4.0
	사업체 수	천개	329	383	54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천명	40,500	50,000	9,500
	지역 안전등급*	등급	3.2	2.2	1등급 상승

* 1~5등급 부여(1등급일수록 안전)

공간발전구상

- 지방시대를 선도할 국토 중남부권 및 동서남북벨트 중심 발전축 설정
- 남부·북부·동해안 3대 경제권과 2포트 시스템(통합신공항, 영일만항)



경상남도 |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

◈ 신기술 융합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역동하는 지역경제
◈ 인재가 모이고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민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경남

- **지역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지방이양사무 및 시군 특례 발굴 지원 및 추진
- **성과·전문성 중심의 효율적 인사·조직 운영** : 공직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평정체계 정비
- **지방세 세수 확보 분야 발굴** :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 발굴추진

〈전략 2〉 모두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인재 경남

- **지속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 교육 공공성 강화로 교육복지정책 추진
- **경남 정주 신산업 선도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 산학협력을 통한 경남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 **경남 미래융합교육센터 구축** : 고등교육기관 및 지역민 중심의 범공용적 교육센터 설립

〈전략 3〉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성장 경남

- **기회발전특구 조성** : 국내·외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역량 강화
-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
-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 사람·문화·산업이 공존하는 집적화된 복합공간 구축

〈전략 4〉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특화 경남

-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 항공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지원
- **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 : 혁신형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 랜드마크 해상도로망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

〈전략 5〉 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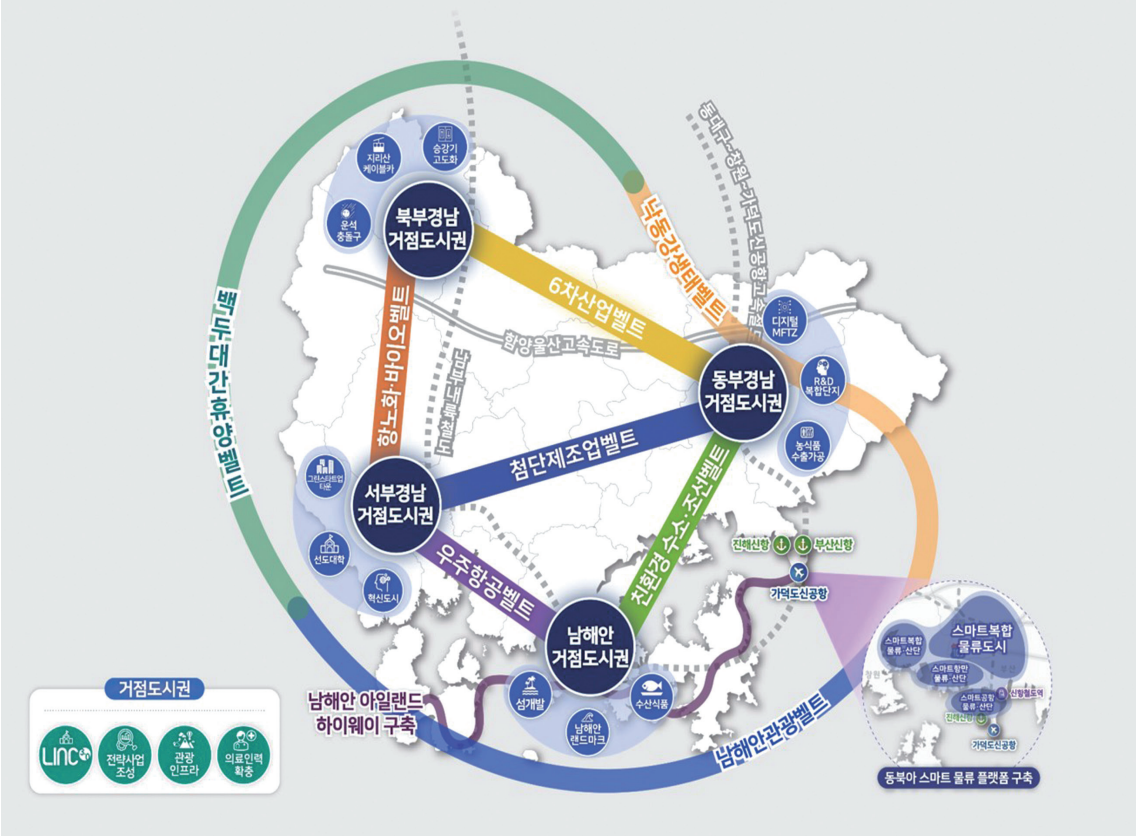
- **의과대학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 : 도내 의과대학 설립 유치 및 기존 의대 정원 확대 건의
-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응 강화** : 재해·재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추진
- **탄소중립도시 조성**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4.0	38.9	4.9
	일자리 수	천명	1,779	1,827	48
	재정자주도	%, %p	67.1	69.5	2.4
자율	재정력 지수	지수	72.0	73.0	1.0
	대학/전문대학 취업률	%, %p	68.1	70.0	1.9
	제조업 생산지수	'20년=100	108.7	120	11.3
	국내 관광객 수	천명	6,621	9,783	3,162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점	5.8	6.9	1.1

공간발전구상

- 권역별 특화산업, 관광자원,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육성
- 철도·도로·항만·신공항을 연계한 촘촘한 생활권 및 물류망 구축
- 남해안 – 백두대간 – 낙동강 관광 벨트를 활용한 남부권 관광시대 선도



제주특별자치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 혁신성장, 청정산업, 특화발전으로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전략 1〉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 광역지방정부로서 분권모델 완성(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 설정 등), 재정분권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추진
- **자치역량 제고,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및 책임성 확보** : 공직·도민 역량 강화, 제주형 주민자치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자치분권 선도모델 구현(규제자유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등),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감사위 기능 강화

〈전략 2〉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교육개혁 제주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와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대학 육성 추진, 디지털 교육혁신/교육격차 해소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 유·초 연계 교육 강화, 초등돌봄교실 지속·확대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도민대학 운영,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서 일반-교육자치 통합성 제고(유보통합, 교권강화 등)

〈전략 3〉 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선진경제 제주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추진,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을 통한 창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우주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능형 물류체계 구축, 상장기업 육성·유치,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전략 4〉 풍성한 자원과 문화가 빛나는 특화발전 제주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 관광청 신설 추진,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해녀의 전당 건립, 평화대공원 조성, 주민주도형 웰니스 관광 등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 5G기반 드론·UAM 지구 조성, 컨테이너 부두 조성,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수소트램 추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등

〈전략 5〉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민행복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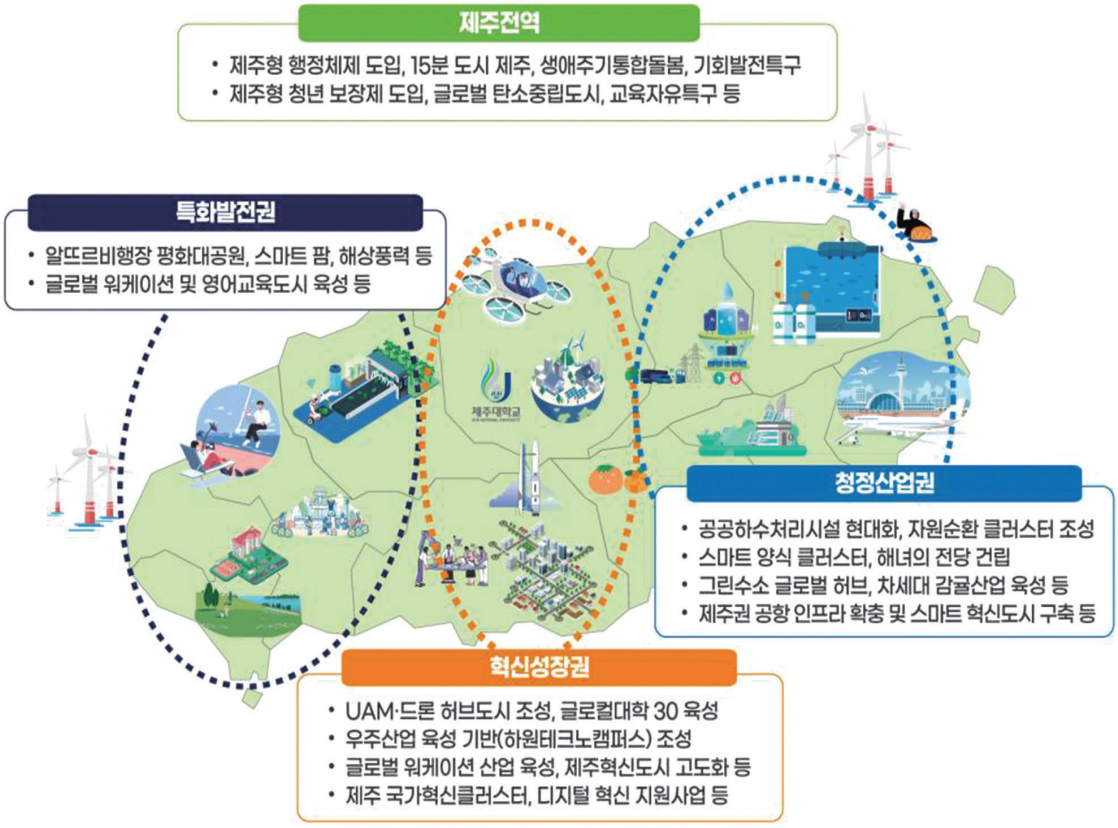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 : 15분도시 제주 조성,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보건시스템 강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등
-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도시 생명 숲 조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등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0.0	34.5	4.5
	일자리 수	천명	402	435	33
	재정자주도	%, %p	68.5	70.5	2.0
자율	재정 규모	조원	8.7	11	2.3
	지역대학 지역내 취업률	%, %p	64.5	68.5	4.0
	수소생산규모	톤	33	2,263	2,230
	관광조수입	억원	63,400	71,400	8,000
	생애주기통합돌봄	개소	18	46	28

공간발전구상

- **혁신성장권** : UAM 상용화·우주산업 육성 등 제주의 혁신성장 견인
- **청정산업권** : 그린수소,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스마트 혁신도시 구축 등 청정 스마트산업 발전
- **특화발전권** :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제주의 특성화 발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Ⅳ. 중앙정부 부문별 계획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5대 전략과 22개 핵심과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주관 부처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해수부
V.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
	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전략 Ⅰ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Ⅰ-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 **(지방정부 행정권한 확대)**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권한 등 지방이양, 조직 자율성 확대, 맞춤형 시군구 특례 적극 발굴

- **(권한 이양)** 지역 산업 및 개발 관련 규제,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발전 추진

  * 6대 분야(국토농림, 경제산업, 고용, 교육, 복지문화, 제도) 총 67개 과제 지방이양 추진

- **(특례 발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기타 시·군·구 대상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7건 특례 추가 부여('23.4.27.)

- **(자치조직권)**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정원 운영 효율화 등 **자치조직권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지방정부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로 **주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정비분야)** 중소·환경·고용 분야 우선 검토 후 기능 정비 방안* 마련, **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여 검토분야 확대**(해양수산, 산림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TF 운영(2023. 4월.~, 행안·중기·고용·환경부 등)

◆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 보장**

- **(법체계 개선)**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중앙정부 사전 승인 · 협의 및 보고 의무를 최소화하여 **조례의 입법적 지위 상향**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 상향**(시행령→법률), 자치사무 세부 사항 조례로 위임

  *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 검토하는 입법절차

- **(적극조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조례*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자체 공유·확산으로 **조례 입법 활성화**

  * 법령이 정한 사항보다 강화·약화된 기준을 정한 조례 등

Ⅰ-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수입 기반 강화

-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 활용 및 재정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책임성 있는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지방보조금 운영의 시스템화, 재정분석 시 신규지표 개발·반영 등

- **(공유재산)** 공유재산 특례 신설·변경 시 관리 강화, 유휴·저활용 재산의 적극 발굴 등 **지자체 재원 기반 확충**

◆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특회계 확충, 보조사업·지방세 관련 제도 정비

- **(지특회계)**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신규 발굴, 타 회계·기금에서 이관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지속 확충**

  * 지특회계 투자 규모 : ('22) 10.8조원 → ('23) 11.7조원

- **(포괄보조 방식 확대) 지역의 사업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편성 가능한 **포괄보조사업 유형* 확대**('23년 24개 → '24년 37개)

  * 예시 : (산림청) 생활권도시숲조성 (문체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등

-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도 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 **사전심의 강화**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 ('18) 23.5조원 → ('22) 33.4조원

- **(지방세)**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 (현재)서민생활 지원 등 제한적 허용 → (개선)「지방자치법」 상 숄자치사무로 확대

◆ **(지자체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 교부세의 균형발전 재원 역할 제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를 통한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보통교부세)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성장 동력 육성 지원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개편 검토**

  * 지방정부의 표준적 행정 수행 필요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 **(조정교부금)** 現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배분기준 개선, 시·도의 조정교부금 **자율성 확대**방안 검토

  *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가 해당 시군에 배부하는 금액

- **(부동산교부세)** 경제·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부동산교부세*의 **균형발전 재원 역할 강화**방안 검토

  *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지자체 균형재원으로 활용

Ⅰ-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 **(자치단체 역량 강화)** 주민 접점인 읍면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자치단체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복지-안전)** 정보통신기술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여 읍·면·동 **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접촉-지원체계 강화**
  ※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복지센터[가칭] 전환 지원
- **(지방공무원)** 지자체중앙공공민간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국·과장급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 등
- **(지방인사제도)** 자치법규로 이양 적합한 인사법령 발굴·정비,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 자율 도입 등 **지방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의 역할·권한 확대에 따라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정비, 의정활동 지원 추진

- **(제도 개선)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 분법을 검토하고, **의정활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지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등 추진
- **(의정활동)**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의정업무관리 표준화·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 의정업무 포털, 자료유통시스템 등 구축으로 행정처리 간소화

◆ **(주민참여 증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역 주민자치조직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지원

- **(디지털 기반)** 주민e직접(juminegov.go.kr) 플랫폼 기반 주민청구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역 정책 추진**
  * ('22) 주민조례 발안 → ('23) 주민투표, 주민감사 → ('24~) 주민소환투표(예정)
- **(주민자치)** 자치단체별 다양한 주민자치 조직 구성, 주민자치 교육 온·오프라인 제공 등을 통해 **주민 접근성 향상**

Ⅰ-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 **(자치경찰 이원화)** 시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원화 모델의 단계적 도입·확산**

- **(시범실시)**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전북·제주)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 검토

  *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로 분리되었으나, 조직·인력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존치

◆ **(특별자치시도 위상 강화)** 차별화된 설치목적과 행정체제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대로 지역 특화 발전 도모**

- **(분권 모델)**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시범적 제도 도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 구현**

  *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 과감한 특례 확대 추진

지역별 맞춤형 특별자치 모델

- **(제주)** 환경(탄소중립)·경제(관광)·해양도시(섬) 조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단층제 행정구조 등을 고려한 세종형 자치분권 구현
- **(강원)**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규제 완화를 통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 **(전북)** 새만금, 농생명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특례를 통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

◆ **(지역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응

- **(지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이상의 지자체 연합)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능 이양 근거 마련 및 행·재정 지원 강화**

  * 설치 희망권역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추진

- **(공공협약)** 광역 협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없이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제도 신설***

  * **(협력제도 간 구속력 강도)** 사무위탁〈행정협의회〈공공협약(예정)〈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Ⅰ-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 **(지방정부 감사기능 강화)** 자치단체 권한·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장치 마련

- **(감사기구)** 자치단체 독임제 감사기구를 합의제 기구로 전환* 촉진, 감사기구 장의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 확보**

  *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합의제 감사기구(감사위원회) 도입

- **(자체감사)** 감사인력 선발권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 마련,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 등 **내부통제 활동 기반 정비 추진**

◆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에 수반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질 향상

- **(투자심사)** 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면제 요청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도입**

- **(지방채무)** 지방정부 우발(불확정)채무 모니터링 강화, 차환채 비율 축소(100%→80%) 등 **안정적 채무관리로 재정 누수 최소화**

-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통한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채 중점관리 및 자산건전화 등 **재무건전성 강화**

- **(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지방재정·세입분야 전반에 대한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지방의회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담보 장치 마련

- **(의정활동)** 지방행정 종합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LAIIS)에 게시되는 지방의회 관련 지표*의 유형을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 (현재)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안발의실적, 민원처리실적, 의정비 등 5대 지표 공개 중

- **(법령정비)**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및 금지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지방의원 징계제도 개선 추진

전략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II-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 **(교육발전특구)** 학교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추진('23. 下)

○ **(지역주도 교육혁신)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자율학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율적 학교교육 혁신** 지원

*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공고를 존치하되, 시도별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09년 이전 자율학교 지정학교(일반고 43교·중학교 7교, '23.)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는 유지하되, 해당지역(시·군·구)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권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디지털 교육혁신)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하이터치-하이테크*)을 통해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 지원 및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 하이터치 : 교사가 지식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 촉진
하이테크 :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 교육 제공

○ **(디지털교과서) AI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 ('25)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국어 → ('28)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에듀테크)** 정규 수업, 방과후학습 등에서 다양한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의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 에듀테크 구매·관리 가이드 제공, 조달시스템 정비, 에듀테크 활용 모델 개발·안내

◆ **(글로컬대학)**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 개혁을 선도해 나갈 지역대학 집중 지원***

* 1) 지정규모 : ('23년) 10개 내외 → ('26년) 30개 내외 지정목표
2) 지원사항 : 교당 5년간 약 1천억원 지원, 규제개혁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II-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 (RISE* 구축)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시·도 전담부서·전담기관 설치** 등 '23~'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5년 전 지역에 RISE 본격 도입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 예산으로 전환('25)

** 7개 지자체(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범지역 선정('23.3.9.)

◆ (대학 규제개혁)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자율적 혁신** 지원

- **(규제완화*)** 총 정원 내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의 **획일적 평가** 중단 및 사립대 **유휴 재산 처분 유연화** 등 **규제 완화**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사립학교 시행령」 등 개정('23)

- **(구조개혁*)** 부실 위험이 높은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여 **구조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로** 마련

* 「사립대학(학교)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 (新활력 창출) 외국인유학생, 성인학습자 등 대학의 **새로운 수요 창출** 지원과 **대학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규 일자리 발굴** 지원

- **(유학생)** 지자체 중심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수립('23.8)하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 **(평생교육) 전문대학**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성인학습자 교육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강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23.6~):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외 성인학습자 선발 규모 제한' 폐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등 추진

- **(대학창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반 창업교육, 지자체와 지역 창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지역기반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위한 창업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 지역창업교육협의체 구성·운영 등

II-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행안부·교육부)

◆ **(연계·협력)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학교·대학**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 **(교육재정)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교육서비스 사각지대*** **및 고등·평생 직업교육** 등에 대해 **투자** 추진

  * 급식지원, 체육관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돌봄, 학교 안전 등

- **(러닝메이트)**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

  *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22.7월) 및 국회 정개특위 논의 중

◆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영유아시기부터 **차별없고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 지원

  * 유치원(교육부, 교육청), 어린이집(복지부, 지자체)

  ※ 1단계('23~'24) 유보통합추진위·추진단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 → 2단계('25년~)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본격 시행

- 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추진

◆ **(늘봄학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제공

- **교육청-지자체**가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협력·운영**하고, **인력-프로그램-재정** 등 **자원 공유**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시범운영**('23년, 8개 교육청)을 거쳐 **'25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하고, (가칭)「**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지자체의 역할, 추진체계 및 범부처 초등돌봄 수요조사 등 근거조항 마련

◆ **(학교복합시설)** 학생·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교육·돌봄 운영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수립('23.3.)

-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해 **교육·돌봄** 및 **지역 수요**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수요를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지원**

  * 5년간('23~'27) 매년 약 40개교씩 총 200교 공모·선정

전략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III-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 활성화)**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특구 신설, 지방투자 제도개선 등 **파격적·획기적 접근과 지원**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투자보조금의 지원한도 상향, 고용 최소요건의 일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신규고용 확대 ('22) 3,005명 → ('23) 3,336명

- **지방투자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공장 건설기간 동안 **사전 실시**하여 투자 완료 시점에 **필요인력 적기공급 지원**

  *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 ('23년) 2개 기업 → ('24이후) 10개 기업

◆ **(첨단산업 육성거점)** 지역별 첨단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등 혁신거점 육성, **국가산업단지** 생태계 지원(15개)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7개 단지 지정('23.7) → 확대 검토 소부장 특화단지: 旣 지정된 5개 단지 + 5개단지 추가 지정('23.7)

- 신속한 투자를 위해 **기반시설, 인·허가 등 지원을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R&D 테스트베드** 등 **기업역량**도 함께 **강화** 추진

  * 예: 국가,첨단특화단지 인프라 지원(전력, 용수 등), 첨단인·허가 타임아웃제(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내 인허가 미처리시 처리 간주), 상생벨트(인접 지자체와 기업투자 수익 공유) 도입 등

- **지방정부**가 첨단산업·글로벌 공급망에 맞게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R&D·인재양성·장비구축·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성장거점 고도화)** 지역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거점**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비수도권 14개 시·도) **고도화**

- **클러스터**를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시·도가 자체적으로 선택,**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

  *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22.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역 주도성 강화, 혁신역량의 집적·확산 도모, 경쟁을 통한 클러스터 성장 촉진 등

III-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 **(국가산단)**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지역별 첨단산업 **투자촉진** 및 **全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구축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추진(15개)

- 기업과 지역·중앙정부가 함께 **'범부처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여 애로해소 및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신속 예타 등 추진기간 단축**

◆ **(기업혁신파크)** 획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주도 **성장거점인 기업 혁신파크** 조성

- 신속한 도심·고밀 개발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및 **입주기업 지원****

  * 최소 개발면적(100만→50만㎡)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 기업 지원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개발이익을 활용 등

◆ **(캠퍼스혁신파크)** **대학** 내에 주거·문화·복지 결합된 **도시첨단산단** 조성

-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단지 **조성**(HW)과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산학협력 · 기업지원 프로그램**(SW) 종합지원

  * 창업기업 및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 등에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 차등(시세의 20~80%)

◆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를 **복합개발**하여 청년이 모이는 융복합 거점인 **도심융합특구** 조성(5곳)

- 청년이 선호하는 ①**복합공간 조성**, 기업·대학·산업 등 ②**범부처 협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담기관 설립 등 ③**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도시재생 혁신지구)** 쇠퇴한 원도심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큰 거점사업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추진

- **집·직장 인근**에서 손쉽게 **여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거·업무·상업기능 등이 복합(Mega-Building)된 **혁신지구** 추진(4곳)

◆ **(노후산단)** **대규모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 산단으로 탈바꿈**(5곳)

-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주차장 · 공원 등) **확충**을 통해 일하기 좋고, 산단 근로자의 **주거 · 문화 · 보육기능** 등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환경*으로 조성

  *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중기부 등)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단지 혁신사업을 집중·통합 지원

III-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 **(전략산업 지원) 지역 주도 산업**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연계사업** 추진

- **(첨단장비 확충)**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확보,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주도 첨단 분야 기반구축** 지원*

  * TP,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에 **연구시설 · 장비를 구축·확충**하고 시제품제작 등 기술지원, 기업수요 맞춤형 장비활용 인력지원 등 **수요 지향 모듈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간 연계)**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초광역경제권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들 7개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역 자율로 설정·작성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정부 최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 7개 권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강원/전북/제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 **(중기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 후속사업을 통해 **선도기업 중심**으로 **지역중기 협력생태계를 강화**하고, 잠재·예비기업 기술혁신 촉진

◆ **(산단 제도 혁신)** 첨단·신산업의 기존 산업단지 입주 확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으로의 획기적 개선 등 **30년 만에 산단관리제도 혁신**

- **(첨단업종 유치)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고, **투자 지원 확대**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증설투자시 연접 공장용지(나대지) 임대차 허용, 비수도권 산단 대상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 & Leaseback)'의 자산 유동화 허용 등

- **(노후산단 개선) 문화·편의시설 확충**하여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전환**

  ❶ 편의시설 확충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전환 가능면적 확대**(3만→10만m2)
  ❷ 구조고도화 사업의 **면적**(10%→30%)과 **대상산단**(농공단지, 첨단산단 추가) **확대**
  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 면제**

- **(산단 디지털·친환경화)** 특화업종 등 **산단별 특성에 맞는 제조혁신 및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과 관련된 R&D도 지원***

  *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 창원(기계), 인천(자동차), 부산(소재)에 지원 중('23년 기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역**이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 **공모**를 통해 **심사 · 선정**,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방비 차등 매칭(10~30%) 조건**으로 **지원**
    ↳ ('22년) 120,785백만원 → ('23년) 134,185백만원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 **우대지원**하여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개선 등** 지원 강화

III-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과기부)

◆ **(혁신역량 확충) 지방 주도**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지방 전반으로 연구성과 확산**

* (국정과제 80) 지방과학기술 주권확보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 **(기초·원천연구)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추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지원, 출연(연) 지방조직을 활용한 특화R&D 수행** 지원**

* 지방이 R&D과제를 기획하고 부처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지원하는 상호보완 방식의 사업

** 25개 출연(연) 103개 지역조직(3,395명)을 활용한 지방특성 맞춤형 연구개발

◆ **(개방형 융합연구 추진) 지방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혁신역량 결집**

○ **(혁신 거점확산)** 과학기술 지역거점인 **'연구개발특구*' 활성·고도화** 및 연구산업 밀집지역을 **연구산업단지**로 지정('22)하여 **단계별 지원** 추진**

* 연구개발특구(전국 19개) : 규제샌드박스 특례 혜택 확대, 특별자치도형 신규특구 지정 등 추진

** 연구산업단지(대전,부산 등) : '23년부터 조성(4년)-성장(4년)-성숙(4년) 단계별 지원 추진

○ **(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오픈랩*'** 활용한 대학과 기업의 기술발굴·이전 촉진, **'학연 협력 플랫폼**'**을 통한 인력양성·공동연구·기술사업화 지원

* 지역산업수요에 기반한 우수 연구성과 보유 지방대학을 선정하여 지원

** 충청권(이차전지), 동남권(수소), 호남·제주권(첨단 모빌리티), 대경·강원권(AI)등

◆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지방주도의 중·장기 혁신 계획** 수립, **지방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방혁신 추진지원

○ **(지방 주도 과학기술 전략) 지방주도 과학기술기반** 발전전략인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의 **지역혁신 기능 강화**

◆ **(국가전략기술의 지방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역경제와 접목**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거점 조성**(지역기술혁신허브*) **추진**

* (지역기술혁신허브) 전략기술 관련 강점이 있는 지역기관을 허브로 지정 →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 부합하는 미션을 부여하며, 해당기술 R&D/실증/사업화/인재유치 집중지원

III-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최적 입지** 대상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초기기반** 조성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초기 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산학연 협력체계, 인재·기업 네트워크** 등을 집약적 구축

※ 시범사업 : '23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부산, 대구 선정
→ '24년 시범지역 추가 선정 및 조성지원

※ 지방정부 주도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예타 사전기획 등) 지원 병행

◆ **(4대 新디지털 기술확산) AI·디지털트윈·메타버스·블록체인 등 4대 新기술의 선도지역 중심 확산*** 및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디지털서비스** ** **개발·실증**

* 권역별 AI융합프로젝트, 동북권(대구·경북·강원) 메타버스 허브, 부울경 정보보호클러스터 등

** 교통, 로봇, 물류 등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XaaS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

- **산업 부문별**로 추진되는 **산업AI솔루션 상용화, DX확산기반** 마련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디지털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

◆ **(지역사회 디지털 보급·확산)** 생활SOC(주민센터, 경로당 등) 기반 **디지털 활용교육 고도화** 및 **디지털 SOC 확충**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확산

※ 디지털배움터 교육실적 : ('20년) 42.8만명 → ('21년) 65.6만명 → ('22년) 79.3만명

*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 속 안전 강화, 주민시설 스마트화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보급

- 지자체·공공기관으로의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및 **도입 촉진**

* 스마트 민원작성 도우미(경남 거제, 서울 성동구), 실시간 도시빅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플랫폼(대전소방본부), 빅데이터 기반 대기환경 대응시스템(경북 포항) 등

◆ **(디지털 인재양성)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이노베이션스퀘어** 등의 지역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 SW교육과정 개편, SW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SW융합교육 등 인재양성 지원

** 에꼴42를 벤치마킹한 동료학습, 프로젝트 기반의 글로벌 혁신 교육과정

III-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 **(창업활성화)**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 창업자, 앵커기업, 대학, 지원기관 등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로 창업인프라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기획(지방-중앙정부 협업)

○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추진

*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R&D·바우처 등 우대, 민간 중심의 네트워킹 특화지원 등

◆ **(혁신생태계)** 개별 기관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중앙-지자체-혁신기관이 연계**되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 **정부-지자체-혁신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자율적으로 지역중소기업 성장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컨베이어 형태의 패키지 지원 추진**

◆ **(글로벌혁신특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 및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수출맞춤형 해외 인증, 해외 실증·공동R&D 등 체계적 지원

◆ **(제조혁신)** **AI·디지털트윈 기반 자율형공장, 디지털 협업공장** 등 **선도모델 육성, 지역TP 중심**으로 **제조혁신 지원 네트워크 운영**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위기 징후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위기 징후 모니터링 강화**

* ('22) 5개 지역(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23) 비수도권 12개 지역으로 확대

○ 지역별 **위기단계 결정**(연2회)→**위기예방계획 수립**(1년 단위)→ **중앙-지역의 선제적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의 **연고자원을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H/W)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디자인, 제품 개발 등 사업화(S/W) 연계지원

◆ **(중견기업)** 지역소재 대학-中堅간 **공동 R&D·석박사 인력양성*** 확대, 중견 최대 채용행사인 **'中堅 일자리박람회' 지역 개최** 등 혁신인재 확보 지원

* 지자체-대학-중견 간 컨소시엄(지역 혁신얼라이언스) 구성, 채용연계형 공동 R&D 추진 → ('23년) 3개 컨소시엄(충남, 경남, 울산) 지원 → ('24년) 2개 컨소시엄 추가 선정 계획

전략 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 예산반영 필요시 별도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야 함

Ⅳ-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 **(로컬창업 활성화)**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5년간 1천개)

* (사례 : 금풍양조) 강화 금쌀 막걸리 제조, 문화 공간 및 체험 조성을 통해 '100년 양조장'이라는 상품(아이템)으로 강화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강한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IP 창출 종합지원사업(특허청),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문체부) 등 사업간 연계를 통해 **라이콘***으로의 성장을 지원

*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로컬 브랜드)**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연계·협업**을 통해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권창업을 촉진**하고, **로컬브랜드로 육성**(5년간 40개)

○ 상인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생적 상권을 형성하고 향후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교육컨설팅·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사례 : 서피비치) 양양 군사지역 해변을 서핑 전용 해변으로 조성, 서핑 교육·축제 등으로 영역 확장('21년기준 50만명 방문, 매출 30억원) '양양 = 서핑' 로컬 브랜드 구축

◆ **산업분야 지역정책과제**

◈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기반 확충**

가.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산업부, 국토부)

○ **(인천)** PAV 비행체, 핵심부품(모터 등) 및 추진시스템 시험 인프라 등 **PAV비행체 및 핵심부품 시험·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 **(광주)** 배터리, 자율주행차 센서 등 미래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 미래차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지원**
-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등을 위한 **K-UAM R&D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강원)** 전기화물차 실도로 테스트베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소형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충남)** 미래차 디스플레이 실증, 실주행 모사 시험장비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 **미래차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지원**
- **(전남)** 미래비행체 비행안전 모니터링 및 소음측정 시스템 개발, 적합성 평가 기반 및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등 **미래비행체 특화산단 조성 지원**

나. 원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에너지(CFE) 생태계 조성(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 **(충남)** 내포 뉴그린 국가산단 조성, CCU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거점 도시 육성 지원**
- **(전남)** 태양광 자원순환 기술 테스트베드 및 연구·진흥기관 건립 등 **태양광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가칭)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 **(경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활용 대규모 수소생산·실증 지원, SMR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경남)**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 지원**

다. 수소산업(생산·저장·운송·인증·활용) 지역별 특화거점 구축(산업부, 국토부)

- **(인천)** 액화수소생산체계 구축 등 **수도권 수소산업 집적화 추진 지원**
- **(울산)**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센터 및 안전인증센터 건립 지원 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지원**
-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및 수소 뉴타운 조성 등 **액화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 지원**

- **(전북)** 수소 생산 및 부문별 공급 등 수소특화 산업단지 구축 및 수소 전문기업 집적화 등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기획**
- **(경북)**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표준화 연구 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 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지원**
- **(경남)** 대용량 수소 저장·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지원**

라. 지역 혁신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산업부, 국토부)

- **(대구)**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 **차세대 첨단제조업 육성 지원**
- **(대구)** 그린섬유소재 기술개발, 탄소배출저감 섬유공정 인프라 구축 및 기반기술 확립 등 **그린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
- **(인천)**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정비단지 조성**
- **(충북)** 완성차 제작단지 및 강소부품 특화단지 조성, 미래혁신 철도 R&D센터 및 스마트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충남)** 천안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를 활용 **4차산업혁명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조기 추진**
- **(전북)**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 및 단위 기술별 인터페이스 검증을 위한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과학기술분야 지역정책과제

◈ 우주기술 육성, 데이터·AI 전환 지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가. 우주산업 육성지원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설립(과기부)

- **(전남)** 민간발사장 확충, (가칭)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발사체 특화지구 조성 지원
- **(경남)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가칭)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등 위성 특화지구 조성 지원

나.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인력 양성(과기부)

- **(광주/충북)**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및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 추진
- **(대전) 나노·반도체 중심 국가 산단** 조성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동 분야 연구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추진**

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기부)

- **(부산)**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 블록체인 협력기반 구축 등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원**
- **(대구)** 지역 거점대학 연구실 및 벤처캐피털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이 창업·성장하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 **(광주)** AI인프라 확충 및 AI데이터센터 고도화, AI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개발거점 조성, AI기업 성장지원 등 **AI 집적단지 고도화 지원**
-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대전도심융합특구 연계를 통한 디지털 기술 기반 창업·연구·인력양성 등 **도심융합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 지원**
- **(강원)**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AI의료건강 데이터센터 유치·건립 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의료·건강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영남권) 제조분야 현안 해결**에 필요한 AI 솔루션 확산, **수요기업 데이터 지속 활용**을 위한 AI오픈랩 구축 등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IV-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해수부)

◆ **(지역특화 문화·관광)** 매력적인 로컬 **문화콘텐츠 발굴·육성**과 **지역특화 관광**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

○ **(로컬 문화콘텐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과 로컬명소, 콘텐츠, 명인(人) 등 **'로컬100'** 선정·마케팅

* 지정('23.12, 총 13개소), 컨설팅('24년) 및 3년간(25~27년) 도시당 최대 200억 지원(지방비 50%)

7개 권역별 대한민국문화도시 조성

❶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❷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❸ 문화공간 조성 ❹ 문화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 **(로컬·관광)** 남부권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중심 **'K-관광휴양벨트 구축'**('23~'33), 워케이션 등 **지역 체류형 여행모델 확산***

* 지역 숙박 및 체류 시간을 증대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24년 15개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22~'27 10개소) 등

◆ **(지역특화형 해양관광)** 지역 고유의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권역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어촌 체험활동 지원 시설 확충**

*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리나 등 레저체험시설, 리조트, 음식거리·쇼핑몰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연계한 해양 거점 복합관광도시 조성

* 사업대상지 평가 및 선정(~'24.上) → 마스터플랜 수립(~'24) → 조성 추진('25~)

○ **(체험공간 조성) 어촌 지역**에 숙소·식당·체험거리가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추진 및 낚시산업 육성·문화 확산 등 지원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숙박시설과 식당을 구비하고, 갯벌체험을 비롯한 해양레저, 문화예술, 해양치유, 체육활동이 가능한 어촌 테마파크 조성('23~'27, 총 20개소)

문화·관광분야 지역정책과제

◈ 권역별 문화관광단지 및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 내 체류 관광 확대 및 연계발전 도모**

가. 권역별 문화관광단지 조성 지원(문체부, 국토부)

- **(충북)**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 힐링공간 및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 **산·강·호수 휴양·관광 자원화 지원**

- **(충남)** 금강·백제문화 자원과 가상현실을 연계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등 **금강·백제문화 관광활성화 지원**

- **(전남/경남)** 남도문화 예술지대(남서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남중권) 및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남동권) 조성 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지원**

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관광산업 육성 지원(문화재청, 산림청)

- **(서울)** 맞춤형 공원녹지길 조성 확대 및 공원녹지로의 보행접근성 강화 등 **서울 초록길 2,000km 구축 지원**

- **(울산)**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대곡천 에코지오밸리 조성 등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지원**

- **(대구)** 대구 원도심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인 **경상감영 복원** 등 **역사생태 관광벨트 조성 지원**

- **(전북)** 해양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

- **(제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및 국가무형유산 '해녀' 전승활성화 및 지역관광자원 확대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 지원**

환경·복지분야 지역정책과제

◈ 주거복지 실현, 환경권 보장, 의료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가. 주택공급 확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국토부)

- **(서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역세권 중심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27년까지 서울시에 **공공분양주택**(뉴:홈)* **6만 호 공급**

    * 낮은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로 서민층 주택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저감

- **(경기)**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재정비 방안(기본방침, 기본계획)과 각종 도시·건축규제 완화 사항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마련**을 통한 **정비체계 구축**

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향유권 보장 및 자원순환·생태복원 지원(환경부)

- **(서울)**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및 도심 운행 제한 대상 확대(5등급 → 4등급)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 향유권 보장**
- **(대구/울산)** 대구 및 울산 지역의 **취수원 다변화 및 깨끗한 식수 확보 지원**
- **(충남)** 舊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지역의 생태습지, 복원 자연림 조성 등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추진**
- **(제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 폐플라스틱 및 미래폐자원 활용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지원**

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산업 육성 지원(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 **(강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시스템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지원센터 건립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디지털 헬스 메카 육성 지원**

- **(충북)**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국가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구축 등 **오송 바이오 밸리 경쟁력 강화 지원**
- **(충남)** 경찰, 소방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국립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라. 생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국방부)

- **(서울)**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부산)** 도시 기능 재편, 불균형 발전 해소 등을 위해 도심을 단절시키고 있는 **범천차량기지 이전 추진**
- **(대구)**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
- **(광주)**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 쇼핑 등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부지 10만㎡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지원**

  - 지역주민 생활권 보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및 **광주국제민주인권도시 조성 지원**

IV-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 **(지역특화형 교통·물류)**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

○ **(항만 공간)** 지역산업, 영해관리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 특화항만***을 개발하고, **노후·유휴 항만재개발****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

* **스마트 메가포트**(부산항), **對중국**(인천항, 새만금신항), **석유화학**(울산항, 광양항), **자동차**(평택·당진항), **원자재**(동해신항), **해양관광**(제주항), **국가관리연안항** 등

** (공사중) 부산 북항, 광양항 3단계 등 5개소, (신규추진) 인천 내항, 군산·장항항 등 4개소

○ **(안전한 연안)** 100년 빈도 폭풍해일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항만** 구축, 토지매입을 통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 **국토분야 지역정책과제**

◈ **수도권 30분 출퇴근** 구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가. 철도 인프라 확충(국토부)

○ **(수도권)** 1기 GTX 등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신규 노선 확대 검토,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지원 등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조성**

- 2기 GTX 건설 및 1기 GTX 연장도 검토

○ **(부울경)**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확충을 통해 **동남권 특화도시 구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충청권)** 대전·세종·충북 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축**하고 **수도권으로의 접근성·편리성 제고**

○ **(대구/광주)** 영호남 교류 촉진 및 동서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조속 추진**

- **(기타)**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조속 추진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제고**

  - 충북선 고속화, 문경~김천, 남부내륙철도,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추진

나. 도로 인프라 확충(국토부)

- **(수도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남청라~신월), 남북 고속도로(서울~연천) 건설 및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미연결구간(안산~인천 등) 완성을 통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중부권)**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조기 착공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어상천 무인IC 신설 등으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호남고속도로 지선(회덕~서대전IC) 확장도 병행 추진

- **(남부권)**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추진**
- **(도심 내)** 황령산 제3터널 및 반송터널(부산) 건설, 제2명촌교(울산) 건설 등으로 **단절된 생활권 연결 및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

다. 신공항 건설 등 항공인프라 확충(국토부, 국방부)

- **(부산/경남)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 등 국토 균형 발전 도모
- **(대구/경북)**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 중장거리 노선 운항 등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 **(충남)** 항공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을 위해 서산 군비행장을 활용하여 **충청권 서해 관문 공항 건설 추진**
- **(전북)**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 **(전남)**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을 **동남아 특화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국내선 지역안배 슬롯 배분 추진**
- **(제주)** 제주공항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제2공항과 연계된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추진**

해양분야 지역정책과제

◈ 유휴항만 재개발, 신항만 개발 및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인프라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가. 유휴 항만 재개발로 지역 산업 발전 거점 제공(해수부)

- **(부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
- **(인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 착수 전까지 **일부 구역 우선 개방**

나. 신항만 개발 및 미래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해수부)

- **(전북) 새만금 신항 1단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배후단지 기업유치 등을 통한 **물동량 확보 및 활용방안 구체화**
- **(전남)** 광양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3-2 컨테이너 부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 **(경남)** 항만경쟁력 제고 및 동남권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정 검토**

다.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인프라 구축(해수부, 행안부)

- **(충남/경북)**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 등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지원**
- **(전북)** 해양특화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해양모빌리티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등 **첨단 해양장비산업 육성 추진**
- **(경북)** 환동해 신규 블루카본 발굴 및 탄소흡수 규명 등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등 **환동해권 블루카본 인프라 조성**
- **(제주)** 제주 강정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고, 제주항을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 관광허브항으로 육성 지원**

자치·분권 등 분야 지역정책과제

◈ 실질적인 지방차지 보장,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 및 지역역량 강화(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새만금청)

- **(비수도권 전역)**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대폭 확대,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해제 총량 제외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 **(대전/세종)**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등 **지역 특화산업 역량 확보 지원**

- **(강원)**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분야 규제 완화 및 지역 맞춤형 특례 부여 등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지원**

-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등 혜택 부여**

나.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지원(행안부, 국방부, 금융위, 행복청, 방사청)

-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동남권 해양금융 확대 및 산업은행 정책금융 기능강화 도모

- **(대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국방산업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국방산업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국방혁신기지화 완성 지원**

- **(세종)**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운영,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지원

- **(전북) 전북지역**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발전방안을 지원하여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IV-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해수부)

◆ **(농촌 특화발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농촌 특화지구 도입, 농촌공간정책 지원기관 설치 등 농촌 재구조화·재생 본격 시행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 3. 29. 시행)을 통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주거·융복합산업·관광·재생에너지 지구 등으로 특화 발전 유도

○ **(미래농업발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

* 임대형 스마트팜(선정) : 평창·제천('20) → 양구·장수·신안·영천('22) → 삼척·김제·밀양('23)

○ **(농촌산업다각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 상품화·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추진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선정) : '21년(익산) → '22(평창·포항) → '23(진주)

◆ **(해양수산 특화발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신산업** 육성, **어촌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도형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전환 추진

○ **(해양신산업)** 친환경·첨단선박, 해양바이오, 에너지·자원 등 **지역별 특화 자원**과 **역량을 고려**한 **해양신산업 육성**

* 향후 5년간 글로벌 상위 10% 이상 5개 선도기술 확보, 글로벌 표준 선점 등

○ **(어촌활력제고) 어촌 유형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경제·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23~'27, 총 300개소)

* (경제거점) 25개, 300억원/개소, (생활중심) 175개, 100억원/개소, (안전인프라) 100개, 50억원/개소

○ **(미래수산업)** 권역별 **스마트양식***(~'26, 총 6개소)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선도사업(2개소) **및 스마트가공 종합단지***** **구축 추진**

* 부산('23,연어), 고성('24,바리류), 신안('24,새우), 강릉·양양('24,연어), 포항('25,연어), 제주('26,넙치)
** 해조류·어패류 중심 가공, R&D 및 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단지(전남·부산, '23.11월 착공)
*** IoT, AI 등 스마트 가공기술을 적용하고 기반시설이 집적된 단지(전북권, 경북권)

농림수산분야 지역정책과제

◈ 지역 보유 농림축산수산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 구축**

가. 농수산식품 가공 및 수출 진흥기반 구축(농식품부, 해수부)

- **(전북)** 국가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 **(경북)**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진흥을 위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나. 미래 농림축산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농식품부, 산림청)

- **(강원)** 목재 가공단지, 유통센터, 선별시설 등 목재산업 단지 구축 및 목재 체험관광 상품화 등 **산림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전북)**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산림레포츠 시설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원**
- **(전남)** 전시온실, 산악열차, 난·아열대 연구센터 및 전망대 등을 갖춘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추진**
- **(경북)** 축분산업화 기반조성, 농촌 에너지 전환설비 구축 등 **축분 기반 소재산업 조성 지원**

전략 V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V-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

◆ **(인구감소지역 지정)** 소멸 위기가 높은 **89개 시·군·구 지정**('21.10.)

◆ **(제도적 지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23.1.1.)으로 지원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상향식**(지자체→국가)으로 **기본**(5년)·**시행**(매년)**계획** 수립
- **(생활인구*)** 7개 시·군 **시범산정**(~'23.12.), 89개 **인구감소지역 산정**('24년~)

  * ①주민등록인구, ②체류인구(월 1회, 1일 3시간 이상), ③등록외국인 등을 바탕으로 산정
- **(특례 활성화)** 교육·보육·주거 등 **특례 추가 발굴** 및 **제도화**('24년~)

◆ **(재정적 지원) 기금 투자·세제 개편·민관펀드 조성** 등 경제적 지원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분기준 개선** 및 사업 간 **연계*** 제고

  * 예)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행안부·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행안부·기재부 등)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기부한도 상향, 홍보 제한 완화 등) **검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교부세)** 인구감소지역에 **보통교부세 지원 확충**(약 1조원→약 2조원, '23년)

◆ **(지역활력 제고)** 청년마을, 로컬브랜딩 등 **지역 활성화** 지원

- **(청년마을)** 도시청년 지역탐색 지원 등으로 **지역 청년 인구유출 방지**
- **(로컬브랜딩) 지역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딩 활성화** 추진

◆ **(취약지역 자립)**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으로 **성장동력 창출 추진**

- **(접경지역) 접경권역 연계성 강화** 및 **지역특화 발전** 추진*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25개 사업, 13.2조원(국비 5.4조원))에 따라 체계적 지원
- **(섬지역)**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식수원, 교통 등) 개선 및 공도(空島) 예방

◆ **(농·어촌 활력증진)** 농·어촌 내외의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확대

- **(농촌)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확충***과 **사회서비스 강화**로 정주여건 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서비스 거점 조성('23년 104개 시·군에 4,131억원)

  ※ 민관합동협의체인 「농촌소멸대응 추진본부」(위원장 차관) 구성('23.5월)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대책 마련·발표 예정('24.1월)
- **(어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연계 및 국가어항 내 **투자여건 개선***, **어선·양식장 임대제** 도입, 창업·주거** 및 자치연금 등 **정착지원 강화**

  * 쇼핑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설치를 허용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 근거 마련

  ** 창업자금 최대 3억원·주택자금 최대 0.75억원 제공/귀어인의집(임시주거) 12개소 마련

V-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산 · 학 · 연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 노력

○ 혁신도시에 지역대학·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여 **청년 인재 유치**

*지역 여건에 따라 ①지역대학 캠퍼스 또는 ②공공기관 연계 전문대학원 등 유치, 오픈랩, 실습지원, 강의, 컨설팅 등 지원하여 실무경험 풍부한 현장형 인재 양성

- **(혁신융합캠퍼스)**기업수요에 맞춰 **주거·산업·공공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 및 **지역 성장동력 확보**

- **(공유오피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매입임대료**를 **지원**하고, 공실 등을 활용한 **혁신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 **(행복도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지원(행복도시법 개정 등)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본격화

○ 청년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를 건립('24, 개교)하여 **대학 입주**를 **유도**하고 **네이버 데이터센터**('23, 준공) 등 **기업 유치**

◆ **(지역정착)** 국토불균형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위해 **지자체 주도 역량 강화 및** 낙후지역·광역권 사업의 **국가지원 확대**

○ **지역발전투자협약*** 본사업 및 **성장촉진지역** 지원으로 지자체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타운****, **광역권협력사업** 확산 추진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지역과 민간(대학·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사업 착수('24년~)
** 지자체 지원규모 및 참여부처 확대로 성과확산 ('23년~, 매년 10곳 이상 지원)

◆ **(새만금)** 글로벌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등 **지역 중심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추진

V-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 **(인프라)** 읍면동 종합상담·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팀 설치 확대***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95.5%, '22년말)

  ** 지역사회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지원:** (제1기) 8개 지역, '20~'23년(4년간, 총 85.6억원), (제2기) 8개 지역, '23~'26년(4년간, 총 79억원 예정)

- **(복지 사각지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추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발표('22.11.24)

  ** 통합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건강관리 등

- **(지역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 **아동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 **(노인맞춤돌봄)**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중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예방적 돌봄을 위해 ICT를 활용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 응급·심뇌 전문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보완대책(9.22)」

- **(취약지 지원)** 의료 **공급이 부족한 취약 지역**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 맞춤형 **돌봄 및 안전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교통 안전 강화

- **(가족지원)** 가족센터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아동돌봄 서비스 확충, 위기·취약대상자(한부모·다문화가족·폭력피해자 등) 적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 **(재난·교통 안전)** 지역별 재난·안전 이슈의 지역 주도 문제해결형 R&D 지원, 보행자 우선도로('22.7월~) 정착 및 확대(행안부, 경찰청, 시 · 도 등 참여)

V-4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 **(친환경·탄소중립기반)** 국민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기업의 탄소중립 기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프라 지원

- **(기후위기대응)**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인프라*** 구축 및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 결빙 취약지에 대해 열선 설치,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설치, 폭염대응 쉼터 조성 등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223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지원

- **(탄소흡수원)** 다양한 도시숲 확대('25년까지 1인당 도시숲 13㎡ 목표)와 국산목재 활용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제시

  * 도시숲(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 자녀안심그린숲, 국유지도시숲) 확대, 임도시설 확충,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 **(산업단지) 에너지 多소비, 탄소 高배출 공간인 지역산단**을 지속가능한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환경조성* 지원

  * ①(신재생 발전 인프라) 창원, 안산·시흥, 구미 등 10개 산단에 인프라 구축 중

  ②(에너지효율화) 산단 입주기업 1050개社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도입 중

◆ **(생태복원)** 지역 생태복원과 지역환경 보전·활용을 위해 산림·해양 생태복원, 국립공원 확대 등 추진

- **(도시)** 도시 내 단절·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하여 서식지 연결 및 생활속 생태공간 제공

  * 도시생태축('23년23→'24년28개소] 및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24~, 환경·국토부)

- **(산림)** 생태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별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지역경제 기여

  * 산림생태복원사업 : ('22) 164ha → ('23) 291ha, 생활밀착형 숲 118개소, 실습정원 25개소

- **(해양)**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 **지역의 문화·역사·해양생태 거점 구축**** 및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 (서해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동해안)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건립('23~'26), 지역별 방문자센터 4개소 순차 조성

- **(국립공원) 국립공원 신규 지정**('23.12월, 팔공산), **지역연계 한달살기프로그램*** 및 장애유형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주요관광지 방문, 농·산촌 체험 등 ** (시각) 수어해설, (지체) 특수휠체어 체험 등

참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실천과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I-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1) 지방정부 행정권한 확대	행안부
			(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행안부
			(3) 자치입법권 강화	행안부 법제처
	I-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 기재부	(1)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행안부 기재부
			(2)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기재부 행안부
			(3) 지자체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	행안부
	I-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1) 지방정부 역량 강화	행안부
			(2) 지방의회 역량 강화	행안부
			(3) 주민참여 증진	행안부
	I-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1) 자치경찰 이원화	행안부 경찰청
			(2)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	행안부
			(3)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맞춤형 기능수행모델 개발	행안부
	I-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1) 지방정부 감사 기능 강화	행안부
			(2)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행안부
			(3)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행안부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II-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1)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통한 지역 공교육 발전	교육부
			(2)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수도권·지방의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3)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대학 육성	교육부
	II-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 중기부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2)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한 자율적 발전 지원	교육부
			(3) 지역혁신 및 지역창업 허브로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	중기부 교육부
	II-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 행안부	(1) 시도-교육청 행정 및 교육재정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 행안부
			(2)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교육부
			(3) 지역-학교 협업의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부
			(4)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III-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방 투자 활성화	산업부
			(2)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거점 신설	산업부
			(3) 지역 성장거점 고도화	산업부
	III-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1) 지방 광역도시 융합 거점 개발	국토부
			(2) 강소지역의 자생력 강화 지원	국토부
	III-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 고용부	(1)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혁신기반 확충	산업부 중기부
			(2) 지역 특화형 고용창출 촉진	고용부
	III-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1) 글로벌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과기부
			(2) 지방과학기술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	과기부
			(3) 지역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	과기부
	III-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1)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과기부 산업부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확산	과기부 산업부
			(3)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확산	행안부 과기부
	III-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1) 지역 창업·벤처투자 기반 구축	중기부
			(2) 지역중소·중견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중기부 산업부
			(3) 데이터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제조혁신 촉진	중기부
			(4)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중기부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IV-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 중기부	(1) 산업 분야 지역정책과제	산업부
			(2) 과학기술 분야 지역정책과제	과기부
			(3) 로컬콘텐츠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재생	중기부
	IV-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 해수부	(1) 문화·관광 분야 지역정책과제	문체부
			(2) 환경·복지 분야 지역정책과제	환경부 복지부
			(3)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
			(4) 지역 연안자원 기반 특화형 해양관광 육성 지원	해수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Ⅳ-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 해수부	(1) 국토 분야 지역정책과제	국토부
			(2) 해양 분야 지역정책과제	해수부
			(3) 자치분권 등 분야 지역정책과제	행안부
			(4) 지역특화형 교통·물류 인프라 지원 및 구축	국토부 해수부
	Ⅳ-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해수부	(1) 농림수산 분야 지역정책과제	농식품부 해수부
			(2) 농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
			(3) 해양수산 지역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	해수부
Ⅴ.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Ⅴ-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 개선	행안부
			(2) 취약지역 자립 역량 강화 지원	행안부
			(3) 농촌형 서비스 강화,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 소멸위기 극복 지원	농식품부
			(4) 어촌 진입장벽 완화, 복지환경 개선으로 어촌 소멸위기 대응 지원	해수부
	Ⅴ-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1)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고도화	국토부
			(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국토부
			(3) 활력있는 새만금 도시조성 기반 마련	국토부
	Ⅴ-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 행안부	(1)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2)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복지부
			(3) 안전한 지역사회·건강한 가족 만들기	행안부 여가부
	Ⅴ-4. 지역 환경·생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 산림청	(1) 친환경·탄소중립기반 구축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2) 지역 생태복원 및 지역환경 보전·활용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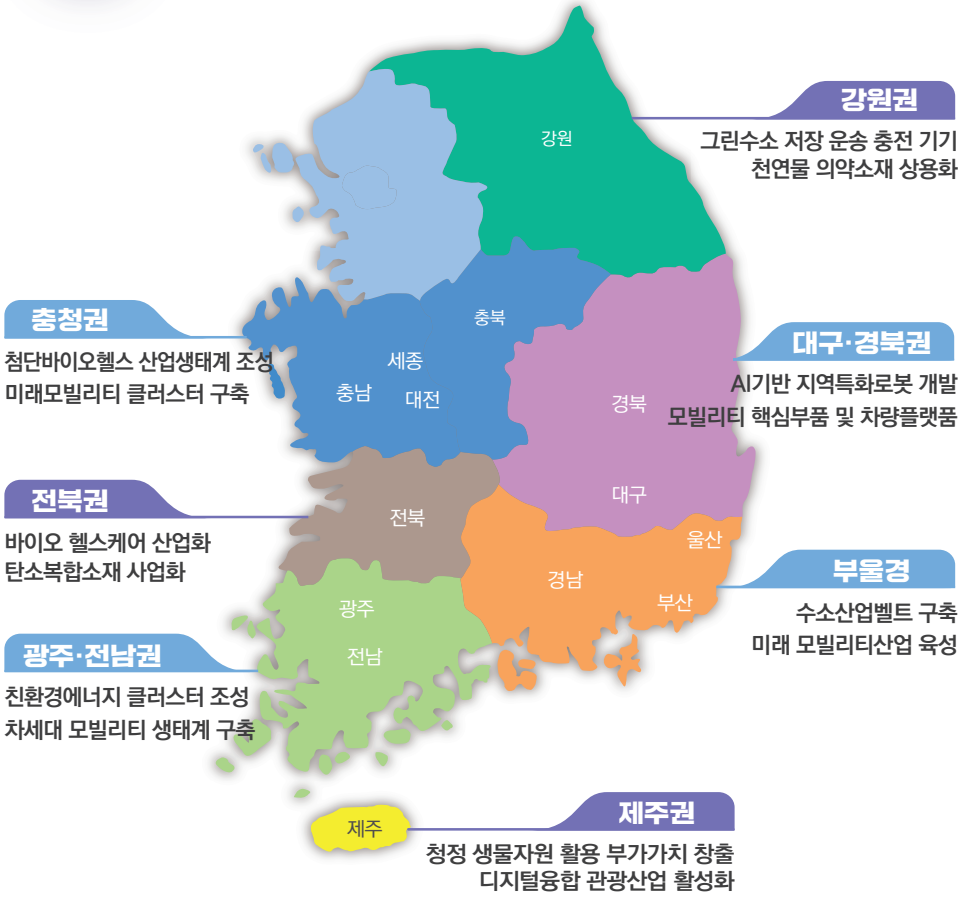
Ⅴ. 초광역권 발전계획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

4대 초광역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 시·도에서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행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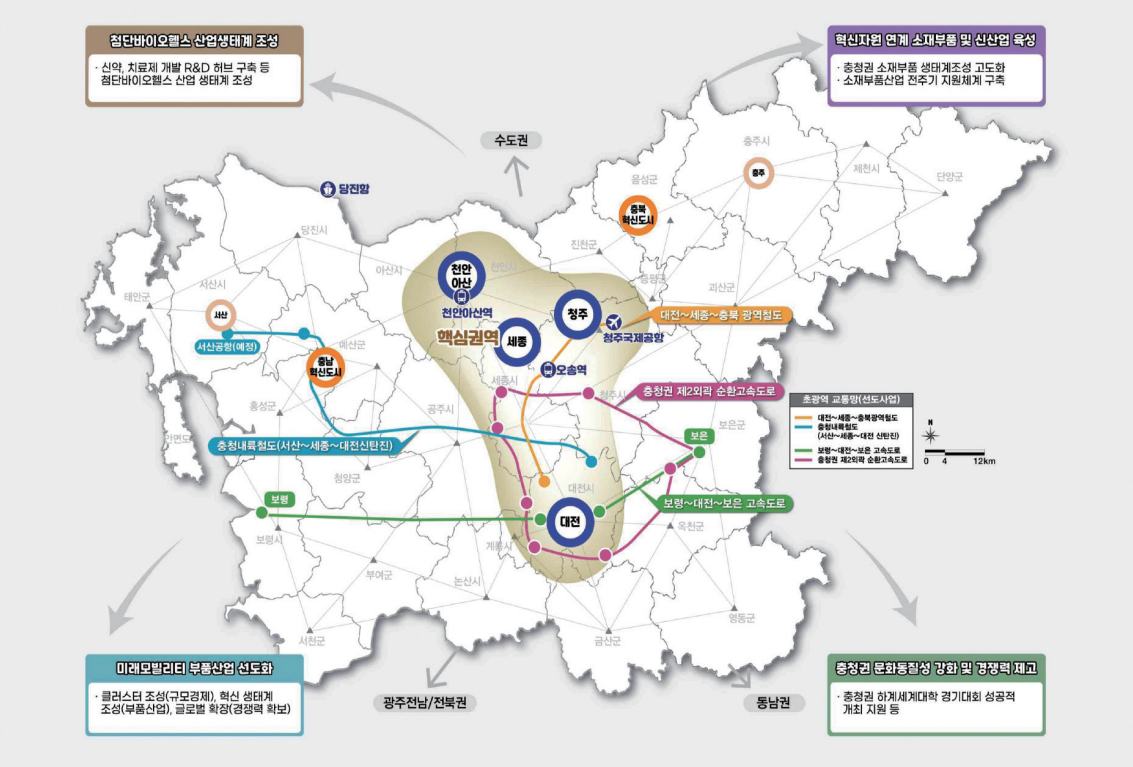
◈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 48.6% 달성
◈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명 달성
◈ 문화관광 초광역 서비스 개발을 통한 관광객 평균숙박일수 2.5일 달성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충청권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 조성
- 하이퍼전기상용차 신뢰성센터 기반 구축
- 충청권 첨단코스메틱 밸리 조성
-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감염대사 질환 치료제 개발
-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개최·운영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 첨단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 문화동질성 강화로 균형발전 도모



광주·전남권 동북아 신성장의 시작! 광주·전남 스마트 통합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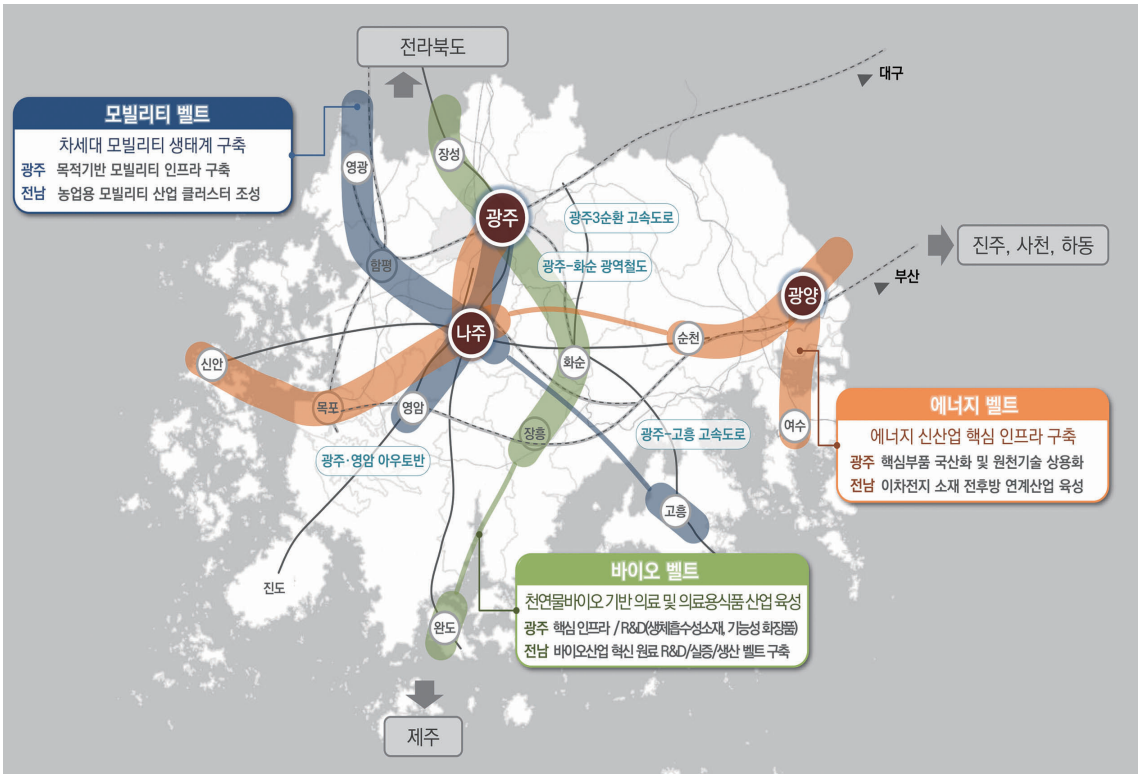
◈ 동북아의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GRDP 125조원 달성
◈ 서남권 통합 1일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명 달성
◈ 인공지능 등 특화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연간 500명 육성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분산전원·AI기반 스마트산단 섹터커플링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구축
- 첨단 후공정 혁신을 위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유캠퍼스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 목적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 천연물유래 의료용식품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및 식품 개발·지원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구·경북권 대경 연대로 글로벌 창의메가시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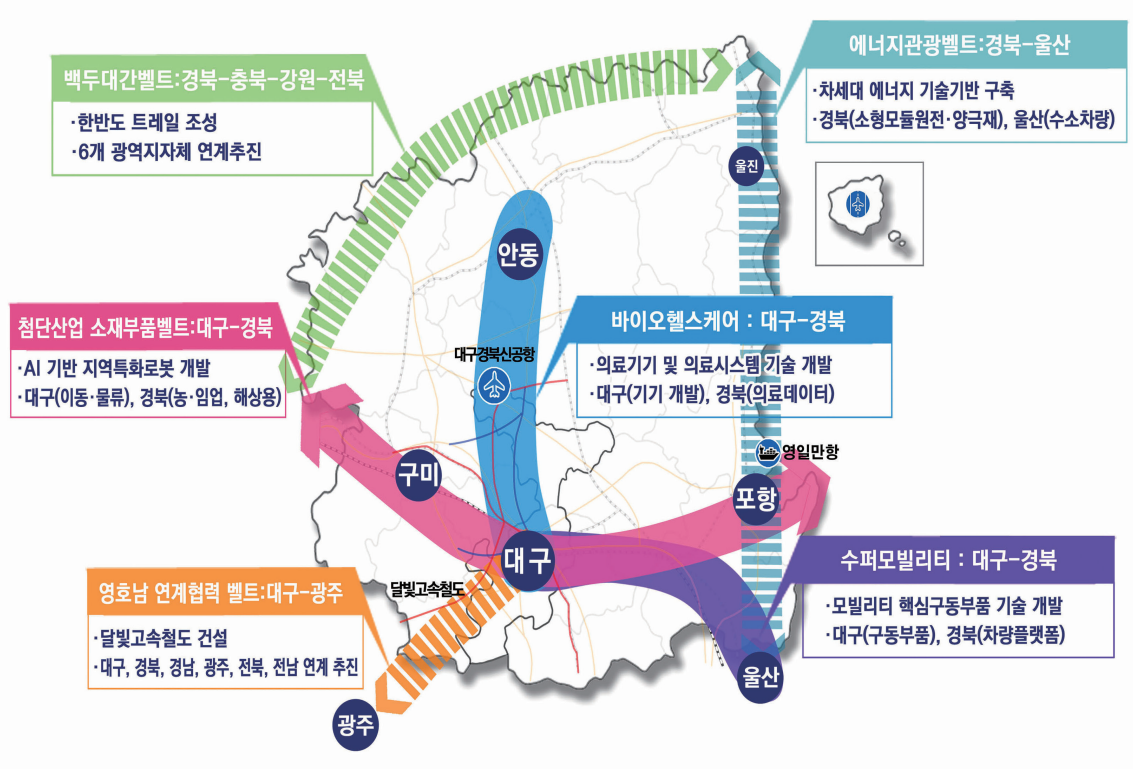
◈ 지역특화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창의인재 2만명
◈ 신공항과 K-콘텐츠의 연계로 외국 관광객 수 200만명
◈ 대구경북 500만 경제공동체 기반으로 GRDP 180조원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구동부품 및 차량플랫폼 기술개발
- 다목적 작업 및 서비스 지원의 AI 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
-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기술개발
- UAM 핵심 기술 및 운항 실증 인프라 구축
- 국토 중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의 글로벌 신국제공항 건설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 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



부울경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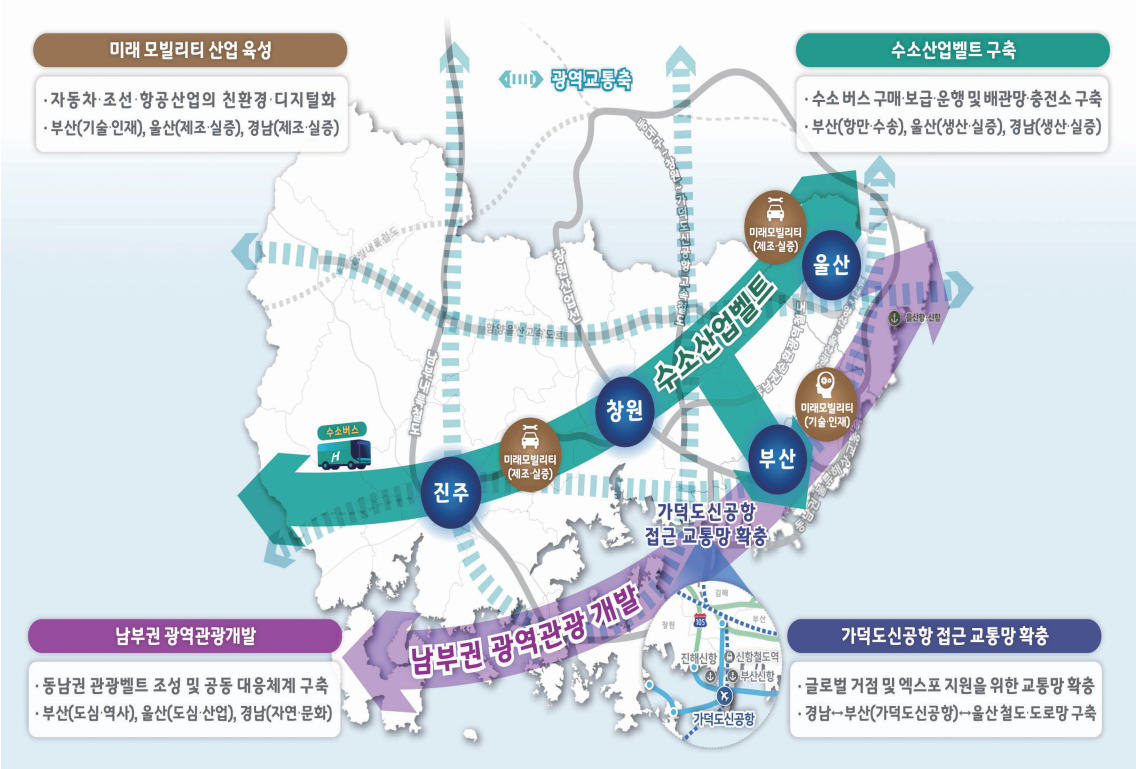
◈ 주력산업 혁신 및 수소생태계 조성으로 연평균 3% 경제성장
◈ 초광역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 문화관광·보건의료 협력으로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 달성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항공 ICT융합클러스터 조성
- 부울경 수소 버스 공동구매·보급·운행 및 수소 배관망·충전소 구축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김해~양산~울산) 건설
-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등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 대응체계 구축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부울경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전북권 | 생명산업 및 전환산업 육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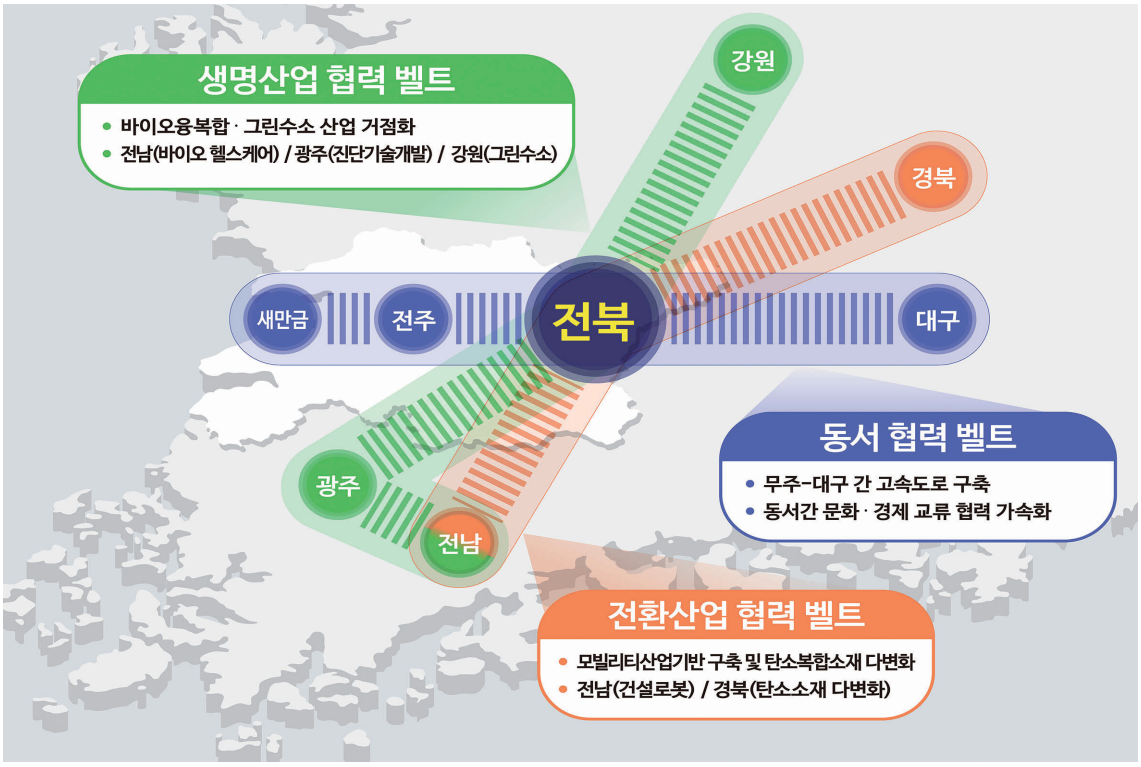
◈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 전환산업 진흥 및 지역상생기반 구축을 통한 180만 인구선 회복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농생명 소재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산업화 기술 지원
- 질병치료·진단기술 위탁 개발 및 실증 기반구축
- 극한환경용 건설 및 수중 탐사 로봇 기반구축
- 석유·석탄계 부산물(탄소소재)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밸류체인 확보
- 무주-대구 고속도로망 및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생명산업, 전환산업, 동서 협력 벨트 구축으로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 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 마련



* 전환산업 : 주력산업의 친환경 및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강원권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과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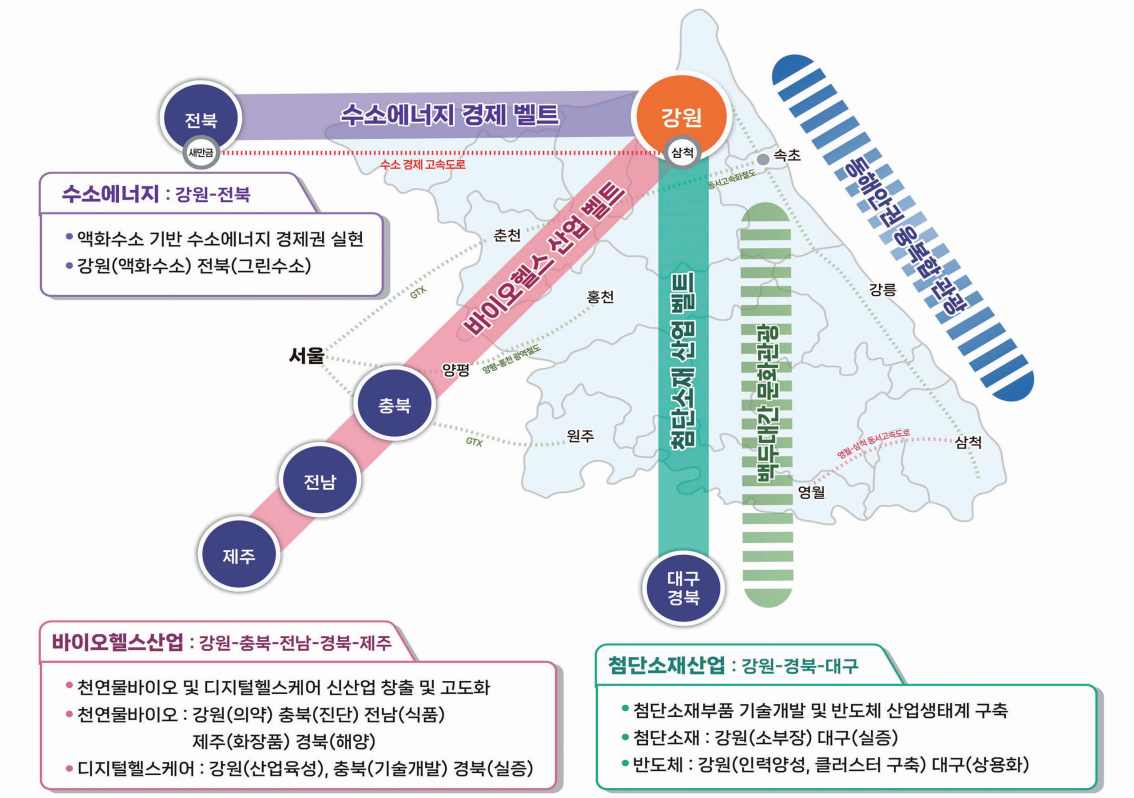
◈ 바이오·반도체·에너지산업 초광역 협력을 통한 GRDP 100조원 달성
◈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으로 생활인구 200만명 확대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액화수소 저장·운송·충전용 기기 개발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천연물 의약소재 광역협력지원센터 조성 및 상용화 지원
- 첨단바이오 진단·의약품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 강호축 중심 백두대간 문화관광 벨트 구축
- GTX-B 노선 춘천 연장 및 동서 고속화철도(춘천~속초) 적기 완공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초광역 협력, 동해안권·강호축 중심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제주권 초광역 생태계 조성으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구현

◈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원 달성
◈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명 방문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세포주 활용 청정생물자원 사업화 혁신기반 구축
- 청정자원 기반 코스메틱 클러스터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차세대 투명 태양광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 분산전원 에너지 기자재 신뢰성 평가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
-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기자재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VI. 지방시대 종합계획 관리 체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01 | 추진 체계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23.7.10.)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

○ 법령 및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과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연계**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시대]
(근거법)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과제(지방공약) **이행지원 총괄**

* [국가균형발전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후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의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지방시대위가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국정과제 111~120)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

◆ **(지방정부 주도성 강화)** 지방시대위 당연직위원으로 **지방4대 협의체장을 모두 포함***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도 지방시대위 설치

* [균형위] ❶**시·도지사협의회/**❷**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자치분권위] 미포함 ⇒ [지방시대위] ❸**시·도의회의장협의회/**❹**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 추가

○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 정책 점검결과를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하여 **지방에서도 정책 추진상황 확인**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2조 ②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지방시대위 심의·의결사항, 지방시대 정책 추진사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시·도 지방시대위)** 지자체의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심의**(시·도)/**협의·조정**(시군구) 수행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舊)지역혁신협의회와 (舊)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합
- 시·도지사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중요성 강조
[국가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4) → **부문별 발전계획안**(§5) → **시·도 발전계획**(§7)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시대 종합계획(§6) → **시·도 지방시대 계획**(§7) → **부문별 계획**(§8)

02 | 성과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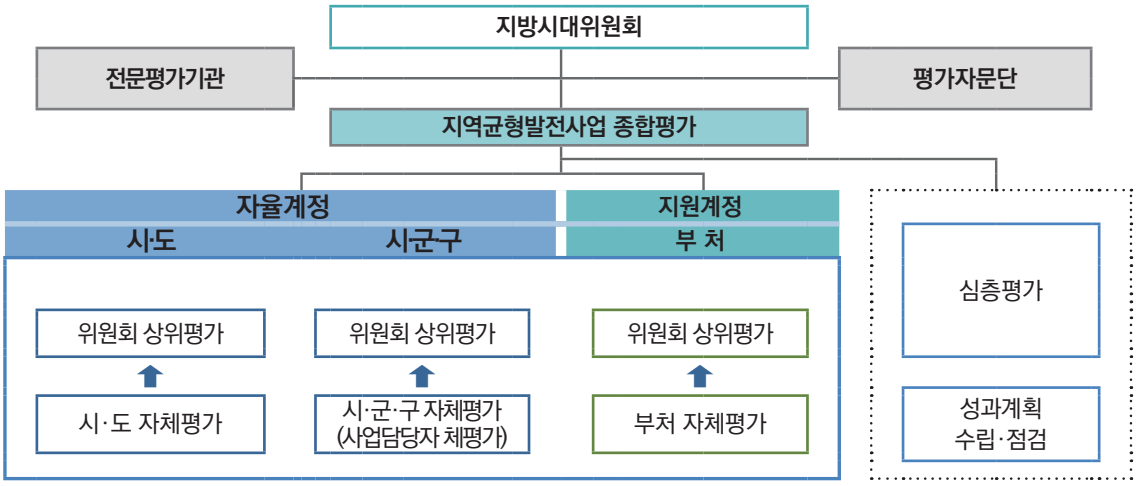
◆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지방정부·중앙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지방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정부는 상호 협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상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분권과 초광역권발전계획 부문이 신규 추가된바, 이에 대한 평가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예산 편성의견 및 지역별 인센티브 차등 배분, 우수사례 포상·홍보 등에 활용

〈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추진체계 〉



0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현황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운용**(4개 계정)

○ **(자율계정)**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거나, 현장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사업을 선택·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 (기재부) 지자체별 지출한도 부여 → (지자체) 사업유형 中 선택하여 자율편성

○ **(지원계정)**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

* 각 부처가 중장기투자계획에 의거하여 지자체 요구를 받아 직접 편성

편성방식 \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자율 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 **'05년 5.4조원**에서 **'24년 정부안 13조원***으로 **규모 확대**

* '23년(11.7조원) 대비 '24년 정부안 **11.1% 증가**(정부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

〈 균특회계 재정투자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05	'18	'19	'20	'21	'22	'23	'24*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	9.9	10.7	9.2	10.3	10.9	11.7	13
(지역자율계정)	(4.1)	(5.2)	(5.5)	(2.3)	(2.5)	(2.3)	(2.4)	(3.1)
(지역지원계정)	(1.3)	(4.3)	(4.8)	(6.6)	(7.5)	(8.2)	(9.0)	(9.6)
(제주·세종계정)	(-)	(0.4)	(0.4)	(0.3)	(0.3)	(0.4)	(0.3)	(0.3)

○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예산요구단계부터 지방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화

*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4조)

○ 지역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자율 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타 회계·기금의 지특회계 이관**을 적극 추진

* 시·도 자율편성 대상사업 확대 (24개 → 37개, 13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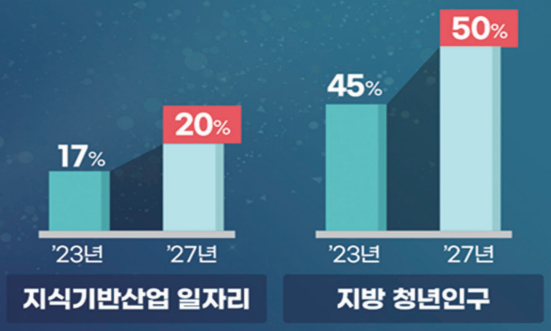
2023~2027

Ⅶ.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납니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됩니다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52% 유지

지역혁신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30개교 육성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합니다

귀농·귀어·귀촌 인구
45만 확보

체류형 생활인구
늘리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부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11. 1.(수) 14:00부터 (11.2. 조간)	배포	10. 31.(화) 14:00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 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 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방시대 5대 전략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2 종합계획 수립 특징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한편,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3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산업, 과학기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1 지역정책과제 추진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2022.4.27)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전략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에 반영하였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에서 2024년 예산반영이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왔으며,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여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과제별 담당부처에서 각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하여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 기회발전특구

◆ 추진 배경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부족이 손에 꼽힌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불합리한 규제,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 추진 방안

❶ **(지방정부 주도 입지 선정)**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 9.14.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세제·재정 등의 인센티브 방향 발표, 10.27.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❷ **(특구 기본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입지·업종·지원내용 등의 방향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입지·규제 등의 사전조사를 전국 광역시·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3 교육발전특구

◆ 추진 배경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정책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 추진 방안

❶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난 9월 14일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10월),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11월 2일(목) 13시 30분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공청회(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❷ **(추진계획 시안)**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①주요 정책 방향, ②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③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④운영 지원체계, ⑤시범지역 선정, ⑥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❸ **(지역별 설명회)** 향후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도심융합특구

추진 배경

그동안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이주하고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기존 지역개발 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추진 방안

❶ **(법령 마련)** 지방 대도시 도심에'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2023.10.6)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❷ **(핵심 선도기술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 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 추진 배경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천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안

❶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❷ **(로컬100 선정)**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여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에 선정*한 지역문화 명소(58개), 지역문화 콘텐츠(40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 명인(2명)을 앞으로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 선정사례 :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안동 하회마을, 신안 퍼플섬, 남원 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 평창 이효석

❸ **(로컬브랜드 발굴·육성)** 지역의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과 소규모 新제조기업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 '24년 197억원, 강한 소상공인 '24년 239억원). 이를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고, 상권기획자 ·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로컬브랜드 예시) 강릉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축제·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 라이콘(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icorn) : 라이프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

※ 기존 특구 고도화·재편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혁신특구(舊규제자유특구)

❶ **(연구개발특구)**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연구개발특구의 전신)를 시작으로 올해로 도입 50주년을 맞이한 '연구개발특구'는 그간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지역 내 연구소기업 설립 1천건 돌파 등)를 창출해 왔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대폭적인 재편을 추진하여 과학기술로 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혁신적 신기술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한다. 그간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광역 연구개발특구(5대), 강소 연구개발특구(14개) 체제를 넘어서서, 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이 추진된다. ▲지역의 유망기술기업이 작은 혁신에 만족하지 않고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대형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지역 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❷ **(글로벌 혁신특구)**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허브로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 기획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등 기술혁신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지난 9월 공고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계획을 통해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6 생활인구 늘리기

◆ 추진 배경

인구절벽 위기를 맞아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등장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생활인구 산정 대상인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은 농어촌이므로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의 인구 유치경쟁을 지양하고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2023.5.18.)

◆ 추진 방안

❶ **(생활인구 산정)** 금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시·군을 선정하여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산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객관적 ·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❷ **(농어촌 활력)**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청년·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와 어촌 신활력 증진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어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❸ **(정주여건 개선)**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한다.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❹**(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의 농·어업분야 취업·창업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기술교육,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 지원하고,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을 선정·지원할 것이다.

❺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인구 확대 또한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 여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여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관광을 통한 방문자 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 '워케이션(Workation)'도 더욱 확산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❻ **(특별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국비지원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7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추진 배경

정부는 지방이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10.24.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 이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3대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5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 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을 제시하였다.

◆ 추진 방안

동 방안은 ▲디지털 기업·인재의 성장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로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둔다.

❶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R&D, 교육시설, 정주환경 등의 지원을 고밀도로 집약한다.

❷**(디지털 기술기반 확보)**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인공지능·데이터 접목을 통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외에도 지방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메타버스 허브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 지방에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❸**(디지털 인재 양성)**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하여,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

❹**(지역주민 생활·안전 개선)**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SOC를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의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8 지방 첨단산업 육성

◆ 추진 배경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 관련 사례 :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오창읍은 '22년 기준 약 6만9천명으로 '10년 대비 약 67%(약 27,000명) 증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탕정면도 인구가 '10년 이후 '22년까지 약 69%(약 13,500명) 증가

◆ 추진 방안

❶ **(특화거점 육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된 거점을 육성한다. 금년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 15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 경기 용인, 대전, 충북 청주(오송), 충남 천안, 충남 홍성,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대구,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총 4,076만㎡
*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 5개 소부장 특화단지 : (반도체 장비) 안성, (전력반도체) 부산, (자율차 부품) 광주, (전기차 모터) 대구, (바이오 원부자재) 오송

❷ **(기술·인재·자금 지원)**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 2.3조원 규모의 R&D 사업이 추진되고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9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

◆ 추진 배경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 추진 방안

❶ **(지역·필수의료 대책)**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월)」, 「응급의료 기본계획(23.3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3.2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월)」

❷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 육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및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 추진 배경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을 넘어서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 추진 방안

❶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시·도, 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상 근거를 폐지하는 등 2024년 1분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계획이다.

❷ **(과감한 권한이양)**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정부 이양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이후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국토·산업·고용 등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양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행상황 전반을 총괄·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방으로 이양할 권한·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❸ **(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최근 지방정부의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지역별 수요·특성에 맞는 자치모델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간다.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조직 없이도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다.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리적·행정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 내용

1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 **17개 부처·청이 수립**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주관 부처
Ⅰ.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Ⅱ.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Ⅲ.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해수부
Ⅴ.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
	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 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 (부문별 계획에 반영)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시도별 주요 지역정책과제

* 과제 내용 및 일정 등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산업

- 영종항공정비 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인천)

교통인프라

-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산월IC) 지하화(인천)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추진(인천)
- 서울-동두천-연천 간 남북고속도로 건설(경기)
-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미연결구간 완성 추진(경기)

지역숙원사업 등

- 재건축, 재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서울)
- 조기폐차 유도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서울)
- 1기 신도시 종합 재정비 방안 마련(경기)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지역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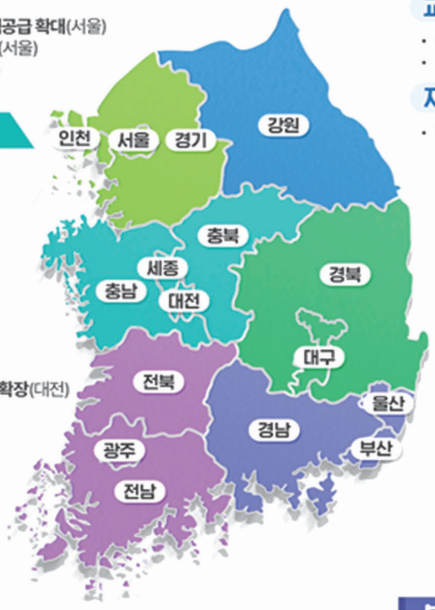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전, 세종)
-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대전)
- 탄소중립 거점도시 조성(충남)
-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충북)

교통인프라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세종, 충북)
- 서산 민간공항 건설(충남)
- 호남고속도로 지선(회덕IC~서대전IC) 확장(대전)
-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

지역숙원사업 등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세종)
-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세종)
- 방위사업청 이전(대전)
- 금강하구, 가로림만 생태복원(충남)



광주 · 전북 · 전남

지역산업

- AI 대표도시 조성(광주)
-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전북)
-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전남)
-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전남)

교통인프라

- 달빛철도 건설(광주, 대구)
- 새만금 인프라 조성(전북)
- 전라선 철도 고속화(전남)

지역숙원사업 등

- 복합쇼핑몰 유치(광주)
-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전북)
- 광주 군공항 이전(광주)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전남, 경남)

제주

지역산업

-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 도시 조성

교통인프라

- 제주 제2공항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지역숙원사업 등

- 해녀의 전당 등 제주 문화가치 확산

강원

지역산업

-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교통인프라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완공
-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착공

지역숙원사업 등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대구 · 경북

지역산업

- 데이터, 로봇 신산업 육성(대구)
-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조성(경북)

교통인프라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대구, 경북)
- 달빛철도 건설(대구, 광주)
- 문경~김천 연결 철도 건설(경북)

지역숙원사업 등

- 대구 취수원 다변화(대구)
- 문화관광 산업벨트 조성(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산업

-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부산)
-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울산)
- SMR 중심 원전기술 개발(경남)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남)

교통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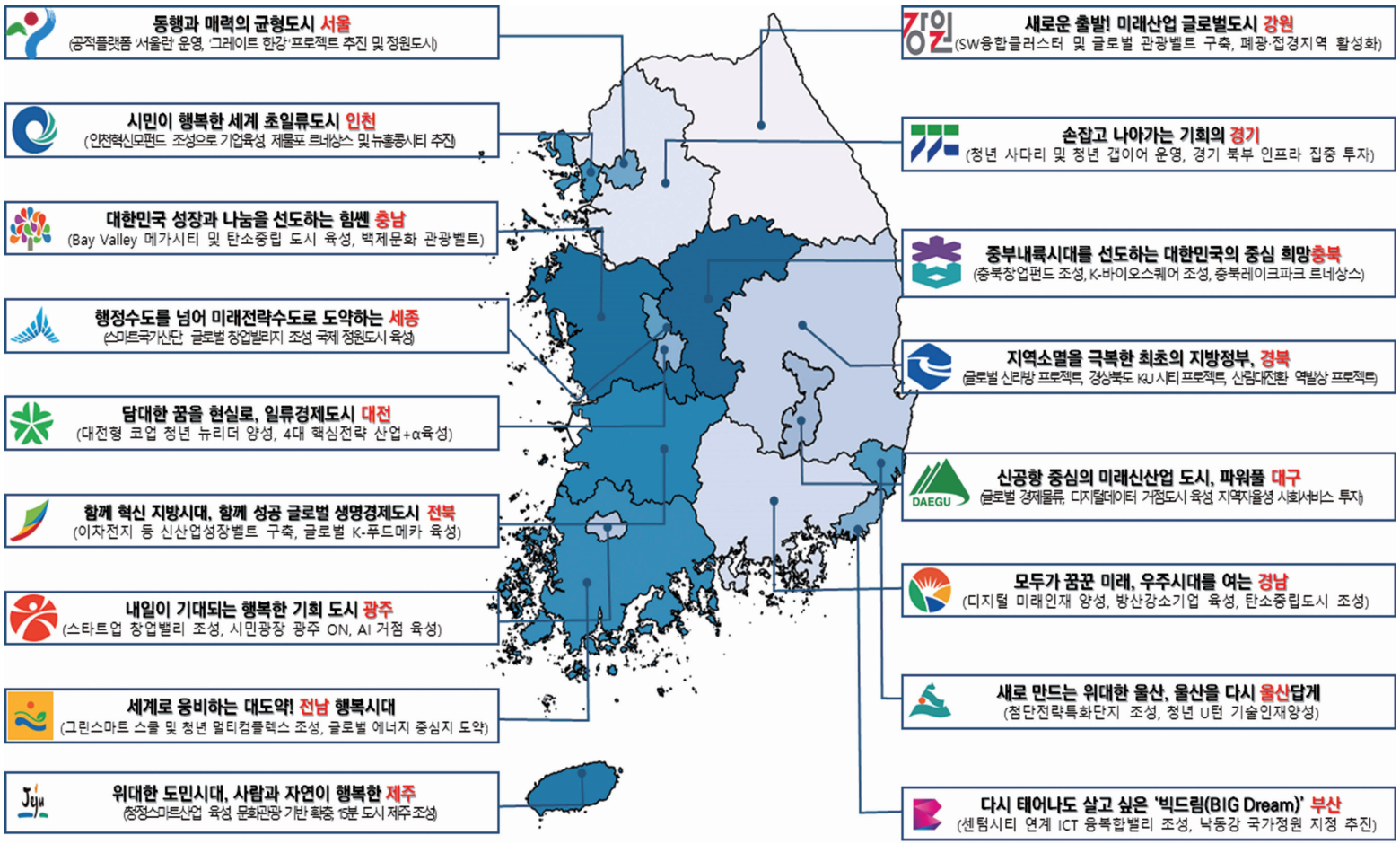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울산, 경남)
- 남부내륙철도 개통(경남)

지역숙원사업 등

- 2030 엑스포 개최 기반 구축(부산)
-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산)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울산)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경남, 전남)

2 시·도 지방시대 계획 (비전과 역점과제 요약 발췌)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



< 시·도 지방시대 계획 (일부 발췌하여 예시) >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정착시키며,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하여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17개 시·도가 제시한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내용은 각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예시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각 시·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행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자치분권 강화 (예시)

(울산)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
(세종)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강원)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
(충북)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전북)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예시)

(광주)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
(충남)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 주민주도 민주주의 강화
(제주)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17개 시·도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

혁신인재 양성 (예시)

(서울)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운영
(인천)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대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울산)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 운영
(전남)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
(경북) 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
(경남)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예시)

(부산) 센텀시티 연계한 도심융합특구
(대구)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 구축
(광주)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
(경남)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강화 (예시)

(인천)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추진
(대전)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양자, UAM) 등 4대 핵심전략 산업(+α) 육성
(충남)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예시)

(경기)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강원)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
(충북)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추진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예시)

(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 강화
(세종)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 강화 및 의료 허브도시 도약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정원도시 서울' 구현
(부산)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
(경북)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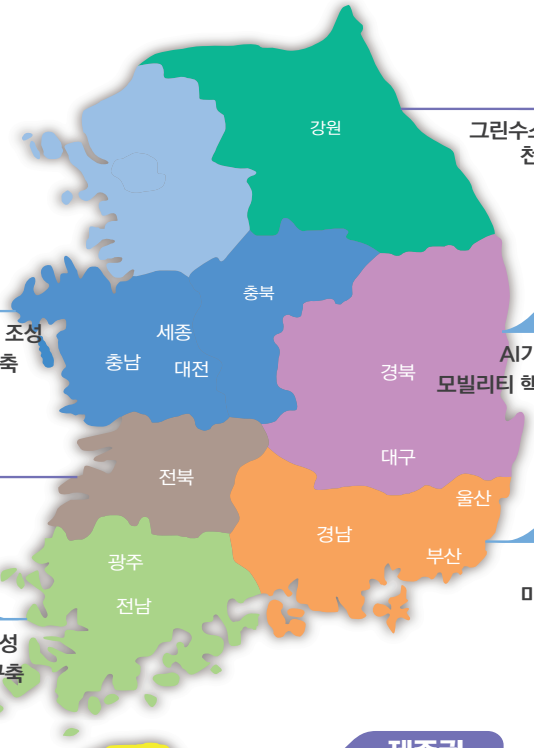
3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 발췌)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

4대 초광역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강원권
그린수소 저장 운송 충전 기기
천연물 의약소재 상용화

충청권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대구·경북권
AI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플랫폼

전북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탄소복합소재 사업화

부울경
수소산업벨트 구축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광주·전남권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제주권
청정 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융합 관광산업 활성화

참고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Q&A

지역정책과제

Q1. 지역정책과제는 무엇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지역정책과제'**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로서,

-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119개)을 구체화하여 **시도별 지역정책과제 255개**(17개 시도×15개)를 **2022년 4월**에 **발표**

◆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①**타 국가계획** 등과의 **연계**, ②**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③**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업** 등의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총괄**

Q2.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는 국비지원 등이 확정된 것인지?

◆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과제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위원회 기획단 內 지역정책지원과 운영중) 마련

-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 반영**되도록 노력

- 다만, 계획 반영 이후에도 **과제추진 과정**에서 **과제 내용 및 일정의 일부 변동***가능

* ① 시도에서 과제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② 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에서 과제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등

기회발전특구

Q. 기회발전특구의 향후 추진일정은?

- 지방정부는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신청 가능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 '24년 예산(안)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 (18.5억원) 반영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과 세제관련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지역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Q. 기존 문화도시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간의 차이는?

-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기존 **문화도시**는 모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 다만, 기존 문화도시 24곳은 개별 지자체 단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면,
  -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광역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도시를 지정·육성할 예정
- 기존 문화도시의 헌신과 성과는 잘 받아서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하여 계승·발전할 계획
  * 추진 일정 : 공모('23.6~11월) → 평가('23.11~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3곳/'23.12월) → 예비사업 추진 및 실적 평가('24년)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13곳/'24.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5~'27년)

(붙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❶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 · 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5.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❷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 · 인프라 투자 활성화 •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 · 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❸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❹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 초 · 중 · 고등학교 설립지원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생활인구 늘리기

Q1. 생활인구 도입 목적은?

- 국가 총인구 감소,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인구개념 설정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

Q2. 체류인구 요건을 월1회, 일 3시간으로 설정한 근거는?

- **월 1회** : 통근·통학 등 주기적 방문하는 사람과 관광·휴양 등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
- **1일 3시간** : 생활시간 조사(통계청), 지역별 체류시간(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업무·학습·여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시간)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Q. 디지털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 디지털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나, **지방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4.3%**에 달하는 만큼, 지방의 디지털 기업도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

  * (디지털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 '16~'21) 비수도권 14.3% 〉 수도권 5.3%

- 우선,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로 육성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최적 입지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디지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범정부 지원**을 집약

-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
  - 특히,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을 확대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Q. 권한이양사무 발굴 및 개선 추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추진

- 향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의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 권한이양 사례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지사 권한 확대(30만㎡ → 비수도권 100만㎡)
-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를 지자체장 허가 권한에 추가)
-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 참여(법무부·고용부→지자체장 참여)
-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권 이양(복지부장관 승인→시군구 승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주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시·도 지방시대 계획

- 서울특별시장
- 부산광역시장
- 대구광역시장
- 인천광역시장
- 광주광역시장
- 대전광역시장
- 울산광역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 경기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충청북도지사
- 충청남도지사
- 전라북도지사
- 전라남도지사
- 경상북도지사
- 경상남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문별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광역권발전계획

충청권
- 대전광역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 충청북도지사
- 충청남도지사

광주·전남권
- 광주광역시장
- 전라남도지사

대구·경북권
- 대구광역시장
- 경상북도지사

부울경
- 부산광역시장
- 울산광역시장
- 경상남도지사

전북권
- 전라북도지사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주체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기획단장 **조봉업**

지방전략국장	**손웅기**	지방산업교육국장	**최우혁**
지방분권국장	**황범순**	지방활력국장	**이명섭**

총괄기획과장	**고상미**		
총괄기획과 사무관	**박이용**	총괄기획과 전문관	**하정석**

지역정책지원과장	**이종찬**	지방산업정책과장	**강은구**
교육문화혁신과장	**김주연**	과학기술진흥과장	**김태권**
분권정책과장	**허영지**	지역공간정책과장	**권미정**
농어촌활력과장	**김재경**		

지원기관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발 행 일	2023년 11월
발 행 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발 행 인	우동기
발 행 부 서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편 집 인 쇄	도서출판 서원 인쇄기획
발간등록번호	12-1833000-000001-13
I S B N	979-11-973656-3-8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비매품
93030

9 791197 365638
ISBN 979-11-973656-3-8